

구글 ‘쿠키’ 무단수집 폐지 틱톡·인스타 “유해물 차단”

이용자 보듬는 글로벌 IT기업

구글, 개인정보 활용 마케팅 중단
광고주 전용 새 구매 도구 도입

틱톡·인스타 성착취 통로 변질에
기능 제한 등 ‘청소년 보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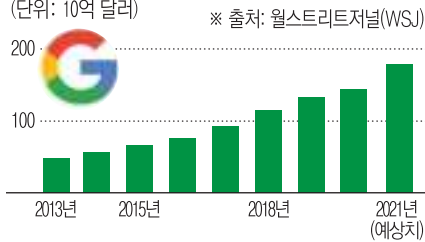
글로벌 IT기업들이 소비자 보호에 속속 나서고 있다. 인스타그램·틱톡은 청소년을 위해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 수집으로 몰매를 맞은 구글은 관련 기술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을 3일 내놔다. 구글은 내년부터 인터넷 사용자들의 방문 기록 추적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것 또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서핑 기록을 이용한 광고도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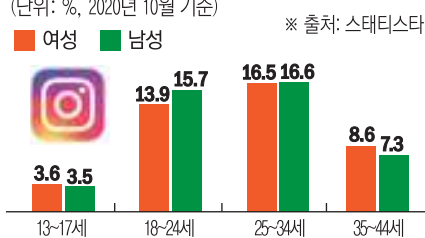
쿠키는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의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파일이다. 로그인 아이디와 암호, 장바구니 내역, 사이트 설정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구글은 쿠키를 활용해 광고가 잠재고객에게 얼마나 도달했는지, 얼마나 많은 클릭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해왔다. 컨설팅업체 자운스미디어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2920억 달러(약 329조 원)에 달했던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5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글이 광고를 내려놓고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나선 것은 애플의 행보와 이용자들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올해 1분기 중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의 검색 내역이나 앱·웹사이트 방문 및 활동 기록 등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는 방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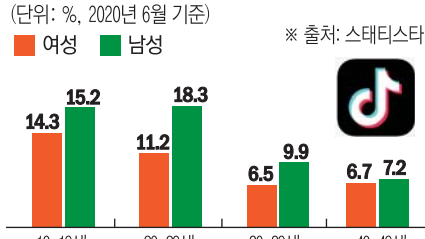
구글 연간 광고수입 추이



인스타그램 연령대별 사용자 분포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연령대별 분포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블루버그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애플의 새로운 추적 방지 기능에 대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으로 철폐를 맞은 것 또한 영향을 미쳤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쿠키를 설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프랑스 규제 당국으로부터 1억 유로(약 13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데이비드 탭킨 구글 제품 매니저는 “디지털 광고가 사생활 보호,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도록 진화하지 않으면 웹의 미래가 위태로워진다”면서 “쿠키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개인 추적 기술을 사용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구글은 광고주들이 이용할 광고 구매 도구에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는 새 기술을 도입했다. 익명화나 데이터 집적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맞춤형 표적 광고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도구다. 광고주들이 개별 이용자 대신 비슷한 습관을 지닌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의 이와 같은 행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디지털 광고업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청소년들 보호 나선 인스타그램·틱톡 = 인스타그램은 2일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안전한 인스타그램 사용 가이드’를 공개했다. 자녀가 원치 않는 교류 및 온라인 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제한하기’ 기능을 도입했다. 제한된 계정이 남긴 댓글은 해당 작성자에게만 보이며, 제한된 사람은 이용자의 인스타그램 활동 상태나 DM(다이렉트 메시지) 확인 여부를 알 수 없다.

틱톡도 1월 만 18세 미만 청소년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의 이와 같은 조치는 SNS가 청소년 성 착취의 통로로 쓰일 수 있어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2020년 피해지원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사이버 성 폭력은 메신저(41.0%), SNS(20.5%)를 통해 가장 많이 일어났다.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을 도용당한 경험 이 있다는 A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매매 아르바이트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일반인 사진 도용도 흔한 만큼 이런 조치가 청소년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박소은 기자 gogumee@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관련, 머리를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LH 직원 땅 투기 죄송”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조사

2·4공급 대책 차질 없이 진행

실거주 아닌 주택 거래 제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발표한 2·4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토지거래 현황 속에 포착될 때는 추가적인 조사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이다. 광명·시흥신도시 등 기존 6개 신도시를 비롯해 과천시구·안산 장상지구도 포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일 소규모 단지도 추가 조사 필요성이 발생하면 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처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고소, 고발, 징계 등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놔다. 주요 내용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 제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해 토지 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방안 강구 등이다. 이재영 기자 lry0403@

태양과 바람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삶은 풍요로워지고
세상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탄소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출근하는
에너지 효율의 시대

한국전력은 에너지 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한국전력 KEPCO

콘크리트 위 흙 덮고 심은 향나무에선 구린내가 났다

르포 '투기의혹 현장' 시흥시 과림동 가보니

시흥·광명 시내 곳곳에 현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현수막
지분 쪼개기 위해 밭으로 바꾸고 보상 높이려 묘목 심어
주민 "LH 땅투기에 수십 년 기다린 개발 무산될 판" 울분

“어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그동안 안 드러나서 그렇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십 년을 기다려 이제야 개발되나 했더니 또다시 연기되고 무산될 위기에 분노만 치밀습니다.”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한 주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두고 울분을 참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LH 직원 여러 명이 3기 신도시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에 나서며 “LH 직원 13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12개 필지를 사들인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흥시 과림동을 포함해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 일대 주민들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공분하고 있었다. 정부의 부동산 개발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비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넘어 이들에게는 주거권이 달린 문제라는 인식이 강했다.

김세정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곳은 일찌감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됐고, 이후에도 신도시 지정이 안 되다가 이제야 났는데 LH 사건이 터졌다”며 “이번 일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올해 64세인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한 시기를 제외하고 평생을 시흥에서 산 토박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예편 후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원주민들의 숙원이 드디어 이뤄지려는데 이번 일로 다시 무산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면서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광역교통망 확충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과 광명시의 거리 곳곳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내용은 ‘주민재산 강탈하는 강제수용 반대’, ‘원주민 쫓아내는 국토부장관 퇴진’,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 등이다.

6번째 3기 신도시 지정으로 힘겹게 모아졌던 주민들의 의견은 다시 사분오열하며 갈등을 키우는 중이다. 정부 계획대로 가지는 측과 환지 개발을 주장하는 측이 맞부딪힌 가운데, 이번 LH 건으로 신도시를 포기하고 현재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시흥시 무지내동 J부동산 관계자는 “이곳에서 계속 산 어르신들 위주로 지금 이대로 사는 게 낫다는 원주민이 늘고 있다”며 “토지보상을 받아도 양도소득세를 떼고 나면 다른 곳에 정착해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자는 이날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에 매입한 시흥시 과림동 땅도 둘러봤다. 기계부품 제조공장과 물류창고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덩그러니 어색하게 흙으로 덮인 부지가 눈에 띄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향나무 묘목들이 빼곡하게 빈틈없이 심겨 있었다.

인근 공장 관계자는 “여기는 원래 빈 콘크리트 땅이었는데 2개월 전 사람들이 트럭으로 흙을 가득 싣고 와서 쏟아부었다”며 “신도시 지정 발표 이틀 후에 다시 와서 묘목을 잔뜩 심어놓고 갔다”고 말했다.

그는 “콘크리트 땅 위에 흙을 덮고 심은 거라 나무가 자랄 수도 없다. 주변에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다”면서 “이후에 뉴스를 보고 이유를 알게 되면서 기가 찼다”고 덧붙였다. LH 직원들의 치밀하게 계산된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입 의심 토지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투기 행보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이 언젠가 개발될 것이란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계속 지연됐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며 “신도시 발표 직전에 흙을 덮은 건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했다는 얘기”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땅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밀집한 지역에 있었다. 폐수로 오염된 하천 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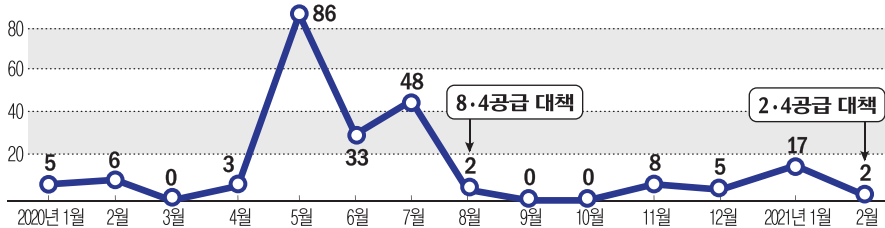
옆에 방치된 모습이었다. 원래 논이었던 땅을 2년 전 갈아엎고 밭으로 만들어 버드나물을 가득 심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

논은 분할 소유가 안 되지만 밭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위해 토지 종류를 답(畓)에서 전(田)으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가 심겨 있는 땅은 나무를 따로 감정해 토지 보상가에 더

해진다. 이곳의 토지면적 3.3㎡당 시세는 2018년 당시 130만 원대에서 현재 180만 원대로 형성돼 있다.

이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었다는 60대 안모 씨는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게 생겼는데, 강제수용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이를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노렸다는 점이 참을 수 없이 화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정필 기자 roman@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현황 (단위: 건)



지난해 ‘8·4 공급대책’ 때에도?

5~7월 토지거래 167건... ‘이상거래’ 정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직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토지 거래 건수는 지난해 8·4 공급대책 발표 직전 3개월간 167건, 올해 2·4 공급대책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이 기간을 제외하곤 한 자릿수 거래가 이뤄졌거나 거래가 없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토지 거래는 1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안을 담은 8·4 대책 발표 3개월 전인 5월 86건(67억 원)으로 폭증

했다. 이어 6월 33건(81억5000만 원), 7월 48건(45억 원)으로 집중 매수가 이뤄졌다. 이들 대다수 거래는 투기에 동원되는 쪼개기(지분) 거래였다. 8·4 대책 발표 후인 8월 토지 거래는 2건으로 급감했다. 이후 지난해 9월과 10월 거래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다가 11월 8건(41억30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어 12월 5건(23억3000만 원)에 이어 올해 1월 17건(64억8000만 원)으로 거래 건수가 급증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가 쏠릴 순 있지만 이 지역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관계기관과 관련 공직자 연루 여부 또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스마트하게 돈버는 지갑, 시럽웰스

시럽웰스는 시럽웰렛 안에서 손쉽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금융 멤버십입니다.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 9시부터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 휴일은 별도)
- * 고객행복센터는 고객님의 문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문의사항 접수 후 1시간 이내 응답)
- * 고객님의 문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문의사항 접수 후 1시간 이내 응답)
- * 고객님의 문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문의사항 접수 후 1시간 이내 응답)
- * 고객님의 문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문의사항 접수 후 1시간 이내 응답)
- * 고객님의 문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문의사항 접수 후 1시간 이내 응답)
- * 고객님의 문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문의사항 접수 후 1시간 이내 응답)

尹, 마지막까지 “민주주의 수호”… 정계 진출 시사

거취 두고 정국 ‘소용돌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전도 불사하며 버티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2019년 7월 부임한 지 1년 8개월 만이자 임기를 4개월 남겨둔 시점에 전격적인 결정이다.

방아쇠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계속된 검찰권 축소와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켜왔지만 이번에는 “법치주의를 지키려 한다”며 물러났다.

윤 총장은 4일 ‘검찰 가족께 드리는 글’이라는 인사글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검찰개혁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한다”며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사퇴하면서 향후 정치 행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공개적으로 ‘민주주의 수호’, ‘국민’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만큼 정치 입문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사퇴 결심 결정타 ‘중수청’ = 윤 총장은 중수청에 상당한 반감을 표시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지검 방문길에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

檢 외부서도 중수청 비판 거세
輿, 설치 강행 땀 尹에 힘 실려

법조계 “사퇴 시점 지금이 적기
‘대구 선언’ 사실상 대선 출정식”

는 ‘부패완판’”이라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맹비난했다.

이날 인사글을 통해서도 중수처 설치 입법 추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 활동”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한다”며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돼 가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소를 하나로 융합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 년이나 축적돼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퇴 시점, 지금이 적기” =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사퇴를 결심한 시기가 절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전자상가 가전매장에서 한 시민이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상 윤 총장으로서의 지금 사퇴하는 게 적기다”라며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할 때 나갔으면 밀려나는 모양새라 보기에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권에 도전한다는 가정하에 그런 모습은 도움될 게 전혀 없다”면서 “지금은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을 위해 스스로를 불사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평론가인 강신업 변호사는 “(윤 총장 사퇴) 이유는 중수청 등에 반발하는 것이지만 이를 명분으로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전날 이른바 ‘대구 선언’을 하면서 현 정권에 각을 세우고 대선 출정식

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 총장이 일선청 순방 일정을 재개 장소를 대구로 선택한 것도 정치권 진출 의사가 담겼다고 봤다.

◇여권, 중수청 설치 강행할까 = 여권은 윤 총장 사퇴로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이기 힘들어졌다. 강행할 경우 윤 총장에게 정치적으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외부에서도 중수청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점도 부담이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부합하지 않으며 비리 척결과 정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은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사직서를 제출받은 뒤 “사의 표명 소식을 접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사직 의사를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지 한 시간여 만에 수용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檢개혁 안고 출발·조국 갈등 여권과 불화·중수청 대립 사퇴 파격 등장서 갈등으로 마감한 1년 8개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전격 사직했다.

윤 총장의 지난 1년 8개월간의 임기는 ‘갈등의 시간’으로 점철된다.

윤 총장은 2019년 7월 검찰의 정점에 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은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했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총장에게 바통을 넘겨준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5기수 차이가 났다.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 청산에 앞장선 공로로 문재인 정권은 윤 총장에게 잔뜩 힘을 실어줬다. 취임 이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주요보직을 꿰찼다.

그러나 문 정권과 윤 총장의 ‘친정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윤 총장은 2019년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자 반기를 들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벌였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윤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수호’ 집회와 ‘조국 사퇴’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국민 분열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위기는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시작됐다. 추 전 장관은 취임 직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로 윤 총장의 손발을 끊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 발동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한 뒤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가족·측근 등 사건에서도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게 했다.

국감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부터 사의 표명까지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9월 9일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10월 14일	조국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2020년	1월 3일	문 대통령, 추미에 법무부 장관 임명. 윤 총장, 추 장관과 대면.
	7월 2일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윤 총장 배제 지시.
	10월 19일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해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 수사 지휘 중단 지시. 윤 총장, 지시 수용.
	11월 24일	추 장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윤 총장 “법적 대응할 것”.
	12월 1일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장지 결정. 총장 직무 복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윤 총장 징적 2개월 의결. 윤 총장 “법에 따라 바로잡을 것”. 문 대통령, 윤 총장 징계 재가. 추 장관, 사의 표명.
	24일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 징적 2개월에 대한 집행장지 결정.
2021년	1월 27일	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
	3월 2일	윤 총장,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에 대해 “수사권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 파괴”.
	4일	윤 총장, 사의 표명 “정의·상식 붕괴 더 볼 수 없어.” 문 대통령, 사의 수용.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주요 발언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2013년 10월 21일(서울고검 국정감사)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
2020년 8월 3일(신임 검사 신고식)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다. 2020년 10월 22일(대검찰청 국정감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2020년 10월 23일(대검찰청 국정감사)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힘 있는 세력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다. 2021년 3월 2일(국민일보 인터뷰)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이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2019년 10월 17일(대검찰청 국정감사)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근거,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후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징계가 청구돼 징적 처분이 내려지는 사태도 벌어졌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직후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범인 직무배제 집행장지 결정으로 자리에 돌아온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였던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금지의혹 등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재점화됐다.

여기에 여당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추진되자 윤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는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결국 윤 총장은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27년 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월성 원전·울산시장·김학의…

권력수사 제동 걸리나

‘친정부’ 이성운 중앙지검장
지휘권 잡을 땐 ‘내풍’ 우려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주던 윤 총장의 부재에 더해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친정부로 분류되는 인물이 검찰 수장이 되면 내용물까지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 관련 사건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금지 의혹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가운데 윤 총장의 사의로 원전 수사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당장 앞선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중요 사건인 만큼 신임 검찰총장이 영장 재청구 보류를 지시하면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다른 방법이 없다.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도 오는 9일 예정된 상태지만, 공소유지도 곤란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신임 검찰총장 취임한 이후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팀장 고형

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발령 나 마번 서울과 대구를 왕복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강백신 부장검사까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아 출장 형식으로 상경하고 있다.

재정지검의 부장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등 정권이 연결된 사건의 동력이 약해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자기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 예상되는데 미래가 암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전국 검찰의 지휘부인 대검찰청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차기 총장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당분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법무부는 곧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전망이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 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교체 요구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차기 총장설이 굳어지고 있다.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親文)’ 인사로 꼽힌다. 일각에선 임기 말을 맞은 정권 입장에서는 여권을 상대로 한 수사를 막아 줄 최적인 ‘방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종용 기자 deep@

與 “정치검찰 본색” vs “정권 브레이크 잃어” 野

민주 “檢 개혁 취임사 거짓으로 판명”... 丁 총리도 유감
국민의힘 “한계 느꼈을 것... 尹 공백 무게 감당해야 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정치권에선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법무부에 사표가 접수됐고 사표수리 절차는 앞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임 인사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정은 윤 총장 사퇴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 성토했다. 반면 야권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마지막 선택지가 ‘사의 표명’임을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고,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국민에게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사의 표명한 것은 국민 위에 있는 정치 검찰의 아주 본연의 모습을 보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 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 왔다”면서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하며 정치 검찰의 능력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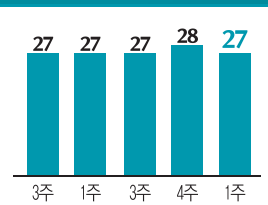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한 사퇴로 검찰의 위상은 더 훼손됐고, 이는 오히려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강화해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은 스스로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고 공언해왔지만, 결국 뜬금없는 사퇴로 검찰 조직을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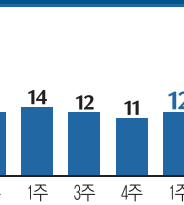
차기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엘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 코리아리서치 · 한국리서치가 3월 1~3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3.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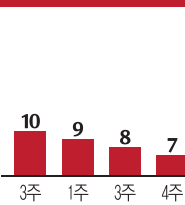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4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자들이 윤 총장의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들게 했다”며 “검찰 조직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유감을 표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윤 총장 사의 발표 직후 진행된 현안 브리핑에서 “임기 내내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받들고 검찰개혁이 완수하길 기대했으나 그런 일(사의 표명)

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윤 총장 사의 배경에 대해 “정권에 맞서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다소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썩은 부위 도려낼 메스가 사라진 격”이라며 우려감도 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검찰총장의 회한이 짐작된다”면서 “사육과 안위가 먼저인 정권의 공격에 맞서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윤 총장의 사의 배경을 짐작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의 ‘우리 윤 총장님’이 사퇴하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낼 수술용 메스가 없어지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권의 핵심과 그 하수인들은 당장은 희희낙락할지 몰라도, 이제 앞으로 오늘 윤 총장이 내려놓은 결과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그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것을 확인한 참담한 날”이라고 덧붙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이꽃들 기자 flowerslee@



4일 임명된 김진국(왼쪽)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올라서며 인사말을 마친 전임 신현수 수석 옆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민정수석 패싱논란 16일 만에 사의→잔류→결국 사표 수리

신현수, 박범계와 검찰 인사 갈등
후임 김진국, 참여정부 비서관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신 수석은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사의 배경으로 박 장관이 신 수석과의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검찰 인사 법무부 안을 밀어붙여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쳐 발표해 신 수석 패싱설에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 사의 표명 당시인 지난달 17일 청와대도 “검찰과 법무부 견해가 달라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다”고 이례적으로 양측의 갈등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신 수석은 지난달 18일 휴가원을 제출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나흘만인 22일 청와대에 출근하며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다”고 밝히며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를 뒤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 수석의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파장을 키웠다. 결국 문 대통령이 4일 사표를 수리하면서 신 수석 사퇴 파동은 파국으로 막을 내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현수 수석이 처음부터 민정수석이라는 직책 자체를 그다지 만족스러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동반사퇴론이 불거질 당시

후임 검찰총장 자리를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윤 전 총장을 대신한 검찰총장 후보군에 신 수석을 포함시켜 인사검증까지 했다는 말도 들린다.

신 수석은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을 직접 소개하며 “대통령님과 함께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법무 검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사법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사회적 갈등 조정에 관한 풍부한 법조계 경력, 소통하는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법무 검찰 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끝까지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할 책임자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수석은 전남 보성에서 출생해 광주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 학사, 서울대 법학 석사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일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방송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이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전임인 신현수 민정수석과도 참여정부 시절 함께 일했다.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난 뒤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일제 피해자인권특위 위원, 민변 부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감사원 감사위원회 임명대 현재까지 재직 중이었으며 김조원, 김중호 전 민정수석에 이어 3번째 감사원 출신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정일환 기자 whan@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Q-Net
큐넷을 조심스레 푼다!

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일학습병행을 일거에 켜기 기쁨에 살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달달 북아서~

WORLDJOB+
International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월드잡을 골고루 뿌려 뿌려!

TV WORK NET
한국직업방송
한국직업방송을 데쳐서~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살짝 엿고

HRDK

당신의 능력개발 레시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어드려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AZ백신 접종後 또 3명 사망…文대통령, 이달 말 접종

해외서도 인과관계 입증 보고 안돼…“안심하고 접종받아야”

신규 확진자 이틀째 400명 웃돌아…변이 감염자 6명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가 3건이 추가돼 누적 5명으로 늘었다. 항원항체반응에 의한 생체 과민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의심 사례도 1건 추가돼 총 8건으로 늘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4일 “현재 돌아가신 분들이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 기저질환이 있다”면서도

“어제 사망한 사례 2건의 경우 컨디션에 관한 객관적인 징후에 대해 ‘정상’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숨진 3명은 모두 요양병원 입원환자다. 2명은 50대 남성(모두 전북)이며, 1명은 20대 여성(대전)이다. 20대 여성은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로, 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이날 새벽 숨졌다.

접종과 사망 간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

다. 권 부분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6000만 회 이상의 접종이 이미 이뤄졌다”며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도 현재까지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접종과 관련돼 의심 신고된 이상 반응이나 사망 사례는 사건이나 사고의 영역은 아니다”라며 “이는 의학과 과학의 영역으로,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예정된 분들은 의료진

의 철저한 예진을 거치고 접종기관의 안내와 지침에 따라서 안심하고 접종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신 접종과 별개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400명을 웃돌았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24명, 이 중 국내발생은 401명이다. 12시(정오) 기준으로 서울 은평구 사우나(총 12명), 동대문구 병원3(총 10명), 경기 이천시 스티로폼공장(총 12명), 강원 원주시 헬스장(총 5명) 등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변이 바이러스도 6건 추가됐다. 5건은 해외유입, 1건은 국내발생이다. 국내발생

은 인천 연수구 수출매매단지 관련 확진자로, 지역사회 감시 강화과정에서 변이주로 확인됐다. 유입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확산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1일 시작되는 주요 7개국(G7) 일정과 AZ 백신의 경우 2회 접종해야 한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께 백신을 접종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6월 개최 예정인 G7 정상회의를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온라인 소비 130조 시대 ‘유통 디지털 혁신’ 이끈다

내년까지 300만개 ‘데이터 댐’ 구축
첨단물류 확충 등 3년간 3000억 투입
배송 등 신규 일자리 2만개 창출

정부가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0만 개 이상 상품정보 표준데이터가 담긴 ‘유통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또 첨단 물류시스템인 ‘폴필먼트센터’ 확충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년간 총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며 데이터, 배송 물류 등에서 2만 명 이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유통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은 지난 10년간 거래액이 약 6배 증가하는 등 급성장했다. 2010년 21조 7000억 원이던 온라인 거래액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30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내놴다. 우선 제조사나 유통, 물류사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내년까지 300만 개 이상 상품정보 표준데이터를 구축한다. 표준데이터는 유

통표준코드(바코드)와 상품명 및 원산지, 제조사, 브랜드사, 상품 이미지, 용량 등 50개 공통정보를 포함해 상품별 최대 500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현재 오프라인 상품을 대상으로 표준데이터 100만 개를 구축한 데 이어 온라인 상품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연내 ‘상품정보등록소’(가칭)를 열어 온라인 유통사와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이 정보를 활용하면 재고관리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쉬워진다. 상품정보와 거래정보, 날씨·지역 등 이중 데이터가 연계된 ‘유통데이터 활용 플랫폼’도 만들어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품종 소량거래와 빠른 배송이 가능하도록 폴필먼트센터 확충도 지원한다. 폴필먼트는 판매자 상품 보관부터 주문에 맞춰 포장, 출하, 배송 등을 일괄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다.

중소업체의 공동물류센터 역할을 하는 ‘공동집배송센터’ 제도를 개편하며, 공공기관 유희부지 활용을 통해 도심 주변의 배송 거점도 확대한다. 또 유통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충하고, 국내 항만 배후단지에도 온라인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소재부품장비 R&D지원센터에서 열린 ‘미래차·반도체 연대 협력 협의체’ 발족식에서 강경성(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현대차·삼성 참여 ‘미래차·반도체 협의체’ 출범

車반도체 수급불안 해결방안 모색…정부, 성능인증 지원 강화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반도체 업계와 함께 수급 불안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래차·반도체 연대 협력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모비스, DB하이텍, 텔레칩스, 넥스트칩, 자동차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완성사업체들은 핵심 차량용 반도체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등 국내에는 아직 차량용 반도체 관련 역량이 부족하다. 반도체 기업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공정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핵심적인 차량용 반도체는 공정개발과 설비증설, 실제 차량 테스트에만 여러 해가 걸린다. 또 국제규격 인증이 필요하고, 가혹한 온도·충격 조건에서도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단기적으로

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 미래차·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 조치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난달 17일부터 차량용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입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용 반도체의 성능평가도 긴급 지원한다. 중장기론 국내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과 성능 인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에너지공단 ‘적정온도 20℃ 캠페인’ 확산

저탄소 생활 실천 노력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이번 겨울 혹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 상황에서 진행한 ‘국민 참여 겨울철 적정온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기존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적정온도 캠페인’으로 개편했다. 적정 실내온도 20℃ 설정으로, 겨울철 건강관리 및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취지다. 적정온도 캠페인은 연령과 상관없이 국민이 함께할 수 있게 생활 속 실천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참여형 이벤트와 웹툰, 트로트 가수, 소셜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홍보도 이뤄졌다.

캠페인 중 하나인 겨울철 에너지 절약 TV 캠페인에선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를 직관적이고 반복적인 가사와 춤으로 표현해 국민이 캠페인 취지를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연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겨울 적정 실내 온도 지키기



겨울철 적정온도 지키기 TV 캠페인 영상.

캠페인인 ‘올겨울, 나는 20도입니다’ 챌린지도 진행됐다. 작년 12월 21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이 챌린지는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국민이 직접 캠페인 음원에 맞춰 20도 춤을 추거나 랩을 만들어 보는 챌린지로, 다양한 연령대가 출연한 58편의 영상이 접수됐다. 캠페인 영상을 포함한 총조회 수는 약 14만 회다.

공단 관계자는 “한 가지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의 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물 건너가나

7년째 국회 계류…공청회도 못열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현 정부에서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에서 조속한 입법을 통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공청회 일정도 못 잡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7년째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끝내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포함하면서 이른 통과가 기대됐지만, 임기 마지막 해에 와서도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활기업(보건복지부) 등 기업형태별로 서로 다른 근거법과 지침에 기반을 뒀 추진돼 오면서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른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지난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고 2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애초 법 제정안이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발의됐지만 무관심하다.

한편 2019년 기준 사회적경제기업은 2만 2036개, 종사자 수는 13만 7954명이다. 전년 대비로 각각 13.6%, 22.7%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고용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비중은 1.1%로 EU 평균 6.3%에 한참 못 미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 1.1% 준 3만1755달러

실질 GDP 1%↓ …환란후 첫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년 연속 3만 달러선을 방어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도 플러스를 유지했다. 반면, 실질 GDP는 1.0% 감소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8년 -5.1%)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GNI는 1.0% 감소한 1조6443억 달러를 기록했다. 1인당 GNI는 1.1% 줄어든 3만 1755달러를 나타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08~2009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2017년(3만 1734달러) 이후 4년 연속 3만 달러대를 유지한 것이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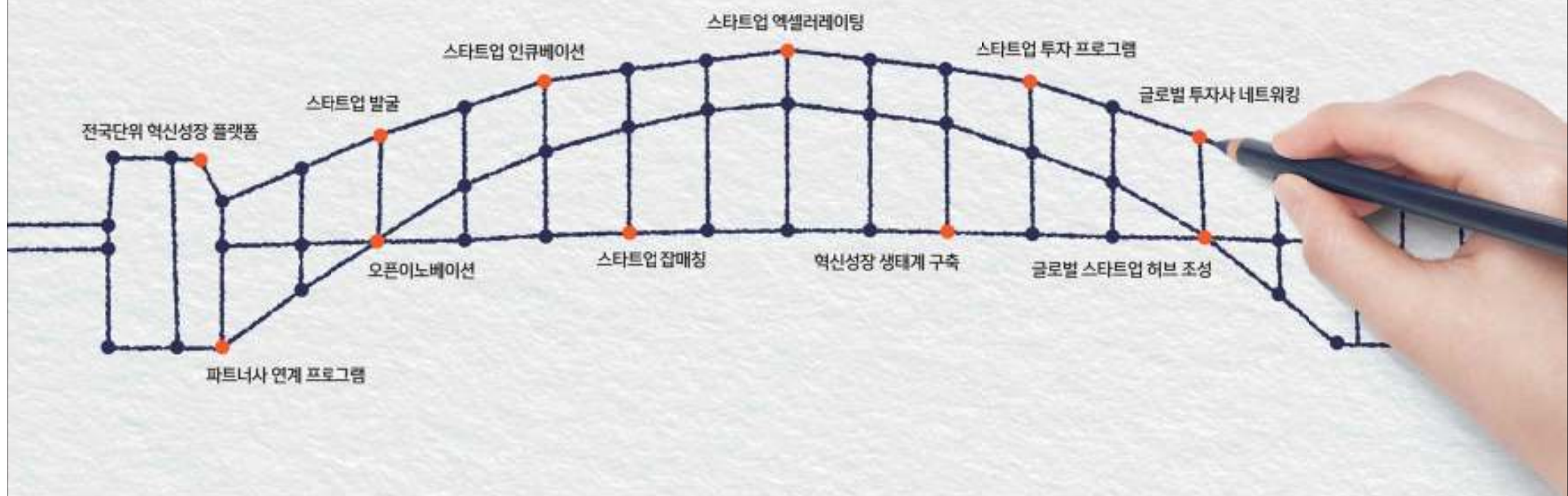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다리, 신한 스퀘어브릿지



이 다리에서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혁신 성장의 내일로 나아가도록
신한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Hope Together.
Grow Together.



대한민국의 기회를 발견하는
기발한 프로덕션의 첫번째 이야기, 스퀘어브릿지



국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安과 ‘단일화 룰’ 전쟁

득표 나경원에 5%P 이상 앞서
安 “빨리 만나야” 및 “일정 조율”
‘시민 여론조사’ 반영 대립각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최종 4·7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오 전 시장은 이제 제3지대 단일 후보로 올라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야권 단일화를 시도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개표 및 후보 발표회’를 열고 지난 2~3일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오 후보가 본선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최종 득표율은 오세훈 41.64%, 나경원 36.31%, 조은희 16.47%, 오신환 10.39% 순이었다.

오 전 시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분열된 상태에서 4월 7일 선거는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길이므로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겠다”면서 “반드시 승리해내서 이 무능하고 잘못된 길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분명한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 또 발표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선 “단일화는 서로 간의 본인 입장만 견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보하고 타협하고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과정을 통해 마음속에 신뢰가 생겨야 비로소 당대당, 후보 간에 가능해지는 작업”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안 대표와의 단일화를 굳게 믿고 의심치 않는다”고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보다 구체화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된 만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룰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 후보는 오 전 시장과 가급적 빨리 만나 단일화 문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와 조만간 만남을 통해 건설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 역시 “개인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뵙고



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오세훈(왼쪽) 서울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오세훈(국민의힘)
주요경력
- 제33·34대 서울특별시 시장
- 제16대 국회의원
핵심 공약
•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규제 개선
• 연립별 주거문제 해결
- 20~30대 세어하우스
- 30~50대 장기 무주택자 청약 특별공급
- 50~60대 클러스터형 주택 공급
• 비강남권 지하철과 국철 구간 일부 지하화해 지역 거점 활용

안철수(국민의당)
주요경력
- 국민의당 대표
- 제19, 20대 국회의원
핵심 공약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5년간 주택 74만8000가구 공급
• 무주택 실소유자 내 집 마련 위해 대출규제 대폭 완화
• 세대별 쿼터제도 도입 등 청약제도 개선

싶다”면서도 “그러나 오늘부터 당의 후보 이기에 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일정 조율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후보 등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최종 단일화 룰에 대한 합의점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 이미 양측은 단일화 경선에 여론조사 결과를 얼마나 반영할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비중을 줄이고 시민 참여를 늘리는 ‘완전 개방형 시민참여 경선 투표’도 검토 중이며 ‘100% 시민 여론조사’를 주장해 온 국민의당은 시민참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비중을 줄이고 시민참여를 늘리려는 이유는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가 우세

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시민참여 경선 투표는 당원 조직력 등에서 앞선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안 후보는 “후보를 뽑는 방법 자체가 비합리적이거나 특정인, 특정 정당의 이해타산에 따라 정해진다면 거기서 아무리 야권 단일 후보가 뽑히더라도 선거에서는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장 후보에 박형준

한편 부산에서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형준 28.63%, 이연주 21.54%, 박형준 54.40% 득표율을 각각 획득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박준상 기자 jooonoon@

박영선, 범여권 단일화 작업 순항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 공약 토론
‘의원 사퇴’ 김진에 사실상 패싱 수준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가 4일 단일화토론에서 주먹을 맞대고 있다. 사진제공 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서울시장 후보가 4일 TV토론회에서 공약 대결을 펼치며 후보 단일화 작업이 순항 중이다. 이에 따라 김진에 열린민주당 후보는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음에도 사실상 ‘패싱’ 수준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조 후보는 이날 MBN 초청 토론회에서 서로의 공약을 펼쳐놓고 경쟁했다. 부동산·주4일제·소상공인 지원책 등 오롯이 공약에 관한 갑론을박만 이어지고, 이후 김 후보와의 추가 단일화를 가정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부동산을 두고는 박 후보의 강북 토지임대부 30만 채 반값아파트 공공분양과 조 후보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서울 주택을 매입해 신속 공급하는 안을 두고 서로 적합성을 따졌고, 소상공인 지원책도 박 후보의 5000만 원 무이자 대출과 조 후보의 서울형 기본소득에 대해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오롯이 서로의 공약에 대한 토론만 나눴다.

이날 토론회가 공약 토론에만 집중된 배경은 후보 단일화와 별개로 두 후보의 정책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함께 벌어서다. 그 결과에 따라 단일후보가 공약을 채택하게 된다. 즉, 범여권 단일후보의 최종 공약도 정한다는 것으로 김 후보와의 추가 단일화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읽힌다.

시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이런 정황에 힘을 실어준다. 단일화 협상을 맡은 김종민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10일까지는 최종후보를 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는 18일까지 단일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

與 검개혁위 “중수청 설치법 다양한 의견 듣겠다”

법안 발의 시점 특정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과 관련해 속도를 조절할 것을 내비쳤다.

앞서 민주당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범죄 등 6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에 이관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4일 전체회의

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오기형 검개혁위 대변인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발의 날짜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 여러 과정을 통해 소통하고 논의가 충분히 정돈된 상태에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히 여러 과정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www.hauri.co.kr

“새로운 바이로봇으로 보안을 강화하다”

더 강력한 기능으로 새로워진 통합백신 - 바이로봇

- 듀얼엔진과 행위기반기술이 적용된 통합보안솔루션 - 바이로봇 시큐리티 1.0
- 다양한 보안위협으로부터 서버를 안전하게 보호 - 바이로봇 시큐리티 서버 1.0
- 조직내 백신 및 보안장치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 바이로봇 매니저 1.0

(주) 하우리 | 서울시 동작구 만안로 104 | 대표전화 02-3676-1100

“백신 맞아야 입국 가능” 전세계 ‘그린패스’ 속도

“경제회복 지원 유용한 수단”
中·EU ‘백신여권’ 도입 추진
기존 입장 바꾼 英도 “검토중”

전 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중국이 모두 백신 여권 도입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안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백신을 접종받거나 검사에서 음성인 나타났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먼저 중국은 개인의 백신 접종 상황이나 최근의 검사 결과를 나타내는 인증서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국경을 넘는 왕래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하며 제어된 새로운 질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기꺼이 이러한 과제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EC)도 이달 EU 시민을 위한 ‘디지털 그린패스’를 제안할 예정이다. 디지털 그린패스에는 백신 접종 여부가 명시되며,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검사 결과가 상세하게 기록된다. EU 지도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까지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EU 시민이) EU나 역외에서 서서히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에 도입을 검토하지 않았던 국가들도 최근 들어 자세를 바꾸는 분위기다. 영국은 지난주 디지털 백신 여권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도입 예정이 없다고 했던 기존 자세에서 한발 물러났다. 중국 역시 백신 여권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뒤바꾼 국가



중 하나다.

다만 미국은 아직 백신 여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여행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이와 관련해 확실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백신이나 접종 증명에 대한 국제 기준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CDC 이주·격리부처의 케이틀린 쇼키 대변인은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그때까지 백신 접종이나 항체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또는 회복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국 정부는 백신 여권이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지탱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도입을 고려하는 자세로 바뀌고 있다. 이들 정부는 백신 여권 도입이 여행·관광업의 재개로 연결,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제를 되살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광 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나 항공업계 등이 백신 여권 도입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이달 여행자가 백신 접종 증명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앱을 선보일 예정이다. 닉 카린 IATA 수석부사장은 “관광객이 없다면 몰락할 나라들이 있다. 또 이들은 스페인과 그리스, 태국 등 절대 작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英 법인세 인상… 기업에 ‘코로나 청구서’

작년 정부 차입 550兆… 법인세 2023년 25%로 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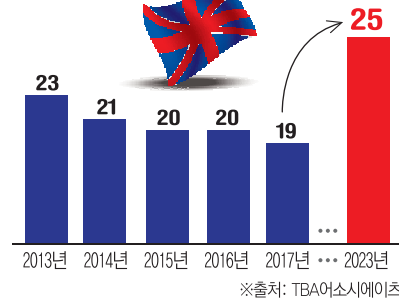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몰린 경제를 구하고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영국이 결국 법인세 인상에 나섰다. 코로나19 기간 돈을 많이 번 기업과 개인에 고통 분담을 촉구한 것으로, 1974년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다.

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50억 파운드(약 102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 예산안을 보고하며 “너무 빨리 지원을 철회하는 것이 무책임한 것처럼, 미래의 부채를 견제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인상 취지를 설명했다.

영국은 2008년만 해도 법인세율이 30%에 달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투자 유치 등을 점진적으로 세율을 낮췄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정책 방향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영국 정부는 기업의 10%만이 25%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순이익이 25만 파운드 이

영국 법인세 추이
(단위 : %)



상인 회사에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순이익이 5만 파운드 이하인 기업은 현행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는 공제를 2026년까지 동결하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과 세액을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세율을 손대지 않으면서도 130만 명이 추가로 소득세를 내게 된다.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이 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 회복을 늦출 수 있다고 반발했다. 영국 최대 재계 로비 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의 토니 댄커 국장은 “법인세를 한 번에 25%로 올리면 많은 기업의 숨통이 막히고, 영국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망설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런던 금융계를 대변하는 로비 단체 더시티UK의 마일스 셀릭 최

고경영자(CEO)는 “영국은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환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법인세 인상은 영국의 세금 정책을 단순화하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가 기업의 반발에도 법인세 인상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부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2020·21 회계연도(작년 4월~올해 3월) 영국 정부의 차입은 3550억 파운드(약 552조 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 수준이고, 2021·22 회계연도에도 차입이 2340억 파운드로 GDP의 10.3%에 달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 총부채는 올해 GDP 대비 88.8%에 이르고 2023·2024 회계연도에는 97.1%로 최고조에 다다를 전망이다.

지난해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끝나 완전히 EU를 탈퇴한 것도 경기 회복을 비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수낙 장관은 “부채를 갚는 것은 향후 수십 년 간 정부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 회복을 위해 어떤 일도 하겠다”며 “어려울 때 정부가 도우니 돈을 많이 번 기업과 개인이 부채 상황에 아바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혜림 기자 rog@



19세 소녀의 유언 태버린 “다 잘될 거야”

4일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머리에 총탄을 맞고 숨진 예인절(19)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사망하기 전 ‘다 잘될 거야(Everything will be OK)’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시위를 하는 사진이 퍼져 나가면서 예인절은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저항 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날 미얀마에서는 쿠데타 발발 이후 가장 많은 38명의 시위대가 총격을 동원한 군경의 유혈진압 속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만달레이/로이터연합뉴스

‘발리우드’에 베틀한 넷플릭스 “印 현지서 40개 콘텐츠 제작”

세계 최대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인도를 ‘썸’했다. 수십 편의 현지 콘텐츠를 제작, 인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최근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들의 격전지로 떠오른 인도시장 공략을 위해 발리우드에 크게 베틀을 했다. 올해와 내년에만 40개의 현지 콘텐츠를 제작한다.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하는 인도 콘텐츠로는 최대 규모다.

모니카 셰르길 넷플릭스 인도 콘텐츠 부사장은 “투자 규모가 2019년과 2020년 지출 규모인 4억 달러의 세 배 정도”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인도에 기대를 걸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유명 프로듀서와 배우를 섭외, ‘고퀄’ 작품으로 인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인터내셔널 에미상을 수상한 ‘텔리 크라이미’ 후속편 제작도 고려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공간을 털어가며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인도 스트리밍 시장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 때문이다. 14억 인구 대국 인도의 영화 사랑은 잘 알려져 있다. 인도 스트리밍 시장 규모는 2017년 3억5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4억

1000만 달러로 4배 성장했다. 스트리밍 업체들이 앞다퉀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서는 이유다. 라이벌인 디즈니와 아마존 프라임의 인도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점도 넷플릭스의 과감한 조치를 부추긴다. 지난해 말 기준 인도에서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는 2500만 명 이상인 반면 넷플릭스는 500만 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가격 면에서 경쟁사에 비해 불리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가격 정책 개선에도 나섰다. 인도 최대 통신사 릴라이언스지오와 협력해 모바일 특화 상품을 출시했다.

인도는 스트리밍 업체들이 놓칠 수 없는 시장이지만 난관도 존재한다. 아마존 프라임은 인도 정치를 소재로 한 드라마 ‘탄다브(Tandav)’ 속 특정 장면과 관련해 힌두교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보수 힌두교도들이 드라마가 힌두교 신을 고의로 모욕했다고 비난한 탓이다.

넷플릭스도 지난해 11월 힌두교 사찰을 배경으로 여성 주인공이 남성과 키스하는 장면이 담긴 드라마 ‘수터블 보이(A Suitable Boy)’로 홍역을 치렀다. 셰르길 부사장은 “압박이 있지만 여러 이야기를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서영 기자 ojung2@

가격 깎은 테슬라 ‘불모지’ 日 뚫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불모지였던 일본 시장에서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주력 차종인 모델3은 수요가 급증, 일본에서 애초 6~8주가 소요됐던 차량 출하 시기가 12~16주로 대폭 늘어났다. 1주 정도 걸렸던 시공 예약 후 대기시간도 3주로 늘어났다.

테슬라는 일본 전기차 시장이 중요하다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판단에 따라 6년 전 진출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지난해 테슬라 일본 판매 대수는 2000대 미만이었다. 일본 내 인지도 역시 현지 완성차 업체에 크게 밀렸다. 닛케리서치가 2019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절반만이 테슬라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이 바뀔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모델3’ 24% 인하하자 수요 급증
日업계 ‘전기車 선점전략’에 당황

주력 차종인 ‘모델3’의 롱레인지(장거리) 버전 가격을 지난달 최대 24% 인하한 499만 엔(약 5240만 원)으로 책정하고 표준형도 511만 엔에서 429만 엔으로 낮추는 등 가격을 대폭 내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구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감안하면 300만 엔 대에 살 수 있다.

일본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이다. 혼다와 마쓰다 등 현지 업체들도 이미 지난해 전기차 판매를 시작했다. 이들이 제시한 전기차 가격은 450만엔 선으로 이제 모델3와 비슷한 가격이다. 그러나 주행거리는 훨씬 짧다. 닛산은 올해 말 전기차 크로스오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아리아를 선보일 예정인데, 모델3보다는 높은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테슬라는 그간 미국과 중국에서는 차량 가격을 낮춘 적이 있지만, 일본에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2030년 중반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테슬라의 공격적 가격 인하는 일본 전기차 시장의 잠재적 가격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미안마 영업중단·뱅크런 우려...은행권, 사업 재검토

쿠데타로 현지 은행 영업중단 1분기 이후 목표 수정 불가피 재무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듯

은행권이 글로벌 사업 목표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했다. 코로나19로 해외 사업 계획을 보수적으로 수립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미안마 유희사태로 사업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다. 은행들은 현지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지 상황의 지속 여부를 살핀 뒤 본격적인 계획 수정에 나설 것이란 입장이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미안마 쿠데타 상황의 지속으로 영업 중단 및 대출 회수 지연에 따른 연체율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올해 글로벌 영업 계획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 디지털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미안마의 쿠데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수치 공개는 어렵지만, 연체율도 상당히 치솟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미안마 쿠데타 상황으로 사실 영업 목표

에 대해 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태가 장기화하면 당연히 국가별 목표가 부여된달 달성할 수 없으며, 특수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실적 역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안마는 지난달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야오산 수지 국가고문 등 민정 지도자들을 대거 체포 구금하면서 군부와 시위대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미안마 중앙은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우려마저 나오면서 개인·기업별 주당 인출금액이 제한되면서 현지 은행은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국내 은행을 포함한 외국계 은행 지점들이 일부 제한적으로 영업을 하고는 있지만,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인 만큼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의 조치를 취하며 영업 활동을 최소로 줄인 상황이다. 이렇듯 쿠데타 상황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조짐을 보이면서 은행별 올해 해외 사업의 목표도 흔들리게 됐다. 대부분의 은행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미안마 진출이 초기 단계여서 전체 사업 계획을 보수적으로 세웠지만, 미안마 쿠데타라는 변수가 생기면

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신규 마케팅이 거의 중단된 상태인 만큼 미안마 현지 상황에 따라 추후 목표 수정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글로벌 목표 수치를 수정하는 대신 미안마 지역에 대한 유동성과 차입 관련 만기연장을 면밀히 살피고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1분기 이후 미안마 현지 상황을 보고 영업 목표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미안마 지역은 KPI(핵심평가지표)가 제외됐지만, 영업 목표가 있다”면서 “연초에 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 보수적으로 잡았으며, 현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맞춰 영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은 비상상황 아래에서 사업 목표치를 수정할 예정으로, 보수적 경영 속 재무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또한 수신 업무 중심으로 영업에 제한이 있는 상황으로, 국가 비상사태의 상황에 따라 수치적인 목표는 추후에 결정할 것인란 입장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문수빈 기자 bean@

은행권, 미안마 사업계획 변경 상황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현지상황 본 뒤 판단	목표 수정 대신 현지 유동성, 차입 관련 만기연장에 집중	1분기 이후 상황 본 뒤 재검토	목표 수정 대신 현지상황 주시	사업 목표치 수정 예정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셔터가 내려진 미안마 양곤의 한 은행 앞에서 시민들이 ATM 인출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외국계를 제외한 현지 은행들은 뱅크런 우려로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양곤 /AFP연합뉴스

권광석 우리은행장 ‘1년 더’ 사모펀드 배상 마무리 ‘숙제’

30% 급감한 순익 회복 부담 김경우 우리PE 대표도 연임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투자 회장이 ‘직무 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황에서 은행장까지 교체할 경우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우리금융은 오는 18일 제재심 속개를 앞두고 있다.

권 행장에게는 실적회복의 과제도 남아있다. 지난해 우리금융이 농협금융에게 업계 4위 자리를 내주게 된 점은 우리금융 핵심 계열사 대표인 권 행장에게도 부담 요소다. 우리금융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1조3070억 원으로 지난 2019년 1조8720억 원 대비 30% 넘게 줄어든 반면, 농협금융은 1조7796억 원에서 1조7359억 원으로 2.4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은행 실적만 보더라도 우리은행의 작년 실적은 1조3630억 원을 기록한 반면,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1조3707억 원을 기록하면서 간발의 차로 등수가 역전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작년 4분기 대규모 명예퇴직과 라임 관련 배상 비용, 코로나 충당금 등 비경상적 요인이 많이 발생했다”며 “다만 우리은행은 최근 적극적으로 마진을 관리하고 있고, 권 행장의 연임과 함께 실적회복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추위는 이날 우리프라이빗 에퀴티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김경우 현 대표를 추천했다. 임기는 1년이다. 서지연 기자 sij@

하나銀, 시중은행 첫 그린론 1000억 주선

하나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친환경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그린론’을 1000억 원 규모로 주선했다고 4일 밝혔다.

그린론은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 효율화 등 친환경 사업으로만 용도를 한정하는 대출이다. 차주는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자금의 사용처 및 성과에 관한 인증을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는 녹색 금융의 일환으로서 자금을 지원받는다.

하나은행이 이번에 주선한 그린론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국내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제3자

인증기관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그린론 인증을 취득했다. 프로젝트금융(PF)으로는 국내 최초의 그린론 실행 건이다.

하나은행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획섹션 관계자는 “그린론 도입으로 친환경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춘 녹색 금융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그린워싱(실제 친환경 경영과는 멀지만 기업이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언제

어디서나

HOME

OFFICE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50% 90%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이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 관리

명함관리

조직도

문서협업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 (군태관리, CRM, PMS, 경비창구, 합빌다, 도매인)

DOUZONE

dt.wehago.com

비대면 서비스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전용 상담 전화 02.6233.2000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증권 세상의 투자를 바꾸다 새로운 기회를 열다

KB증권이 가장 잘하는 일은
지금까지의 투자를 더 좋게, 더 편하게 바꾸는 일!
KB증권으로 인해 세상의 투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환전 수수료 없이 원화로 그대로
글로벌 원마켓



개인 고객도 천만원부터 전문 자산 관리를
KB able Account



소액부터 누구나 간편하게 디지털로 자산 관리를
Prime Club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0272(2021년1월18일) *원금손실가능 *투자 전 설명청취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 [글로벌원마켓] *미국 주식
수수료 온라인 기준 0.25%(매도시 0.00221% 제비용 별도)이며,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서비스 중도해지 시 환전수수료
발생 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Prime Club] *3개월 무료 서비스 종료 후 월 1만원 부과

 KB 증권

SK하이닉스, 美 매출 56% ‘폭풍 성장’… 中 제치고 1위

‘IT공룡’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서버용 반도체 수요 증가 ‘훈풍’
작년 매출 4.5兆 늘어 12.7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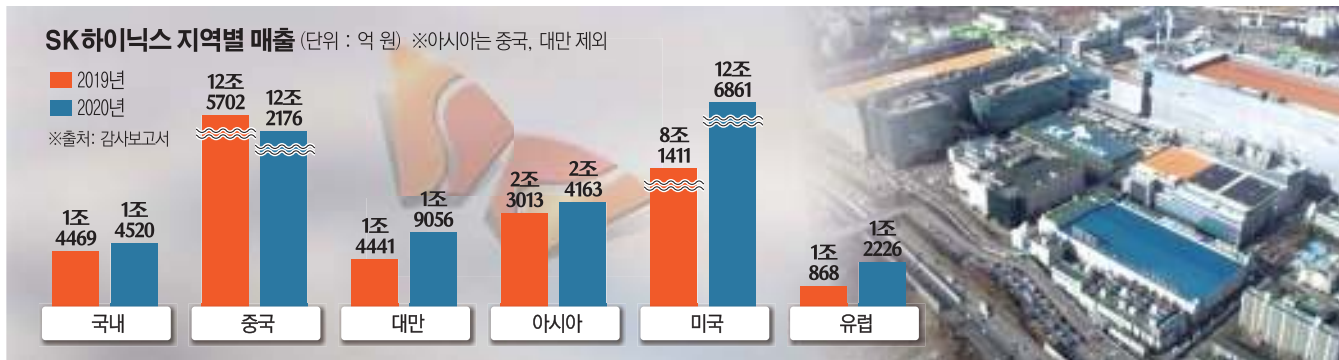
中, 2.8% 감소 지역매출 2위로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미국 매출이 4조 원 이상 증가하며 중국을 제치고 지역별 매출 1위에 올랐다. 작년 하반기부터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주요 IT기업들이 자리 잡은 미국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SK하이닉스가 공시한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지역 매출은 12조6900억 원으로 전년 8조1400억 원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년 만에 4조5400억 원이 늘었다.

반면, 중국 지역 매출은 지난해 12조22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8% 소폭 감소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지역의 매출 순위



는 중국·대만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2조4200억 원(전년 대비 5% 증가), 대만 1조9100억 원(32%), 국내 1조4500억 원(0.3%), 유럽 1조2200억 원(12.5%) 순이었다.

2019년 지역별 매출 비중은 중국이 46.6%로 미국(30.2%)을 크게 앞섰으나, 지난해에는 미국 비중이 39.8%로 중국(38.3%)을 추월했다. 미국 매출이 중국을 앞선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이어 아시아(중국·대만 제외) 7.6%, 대만 6%, 국내 4.6%, 유럽 3.8%의 매출 비중을 나타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매출 증가는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서버용 반도체 수요 증가 덕분에 풀이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는 370억 달러로 역대 분기 최대치를 경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투자를 미뤘던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3대 클라우드 기업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렸다. 이들 3개 기업이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서버용 제품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서버 D램 가격이 10~1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연간으로는 서버 D램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4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고객사들의 서버 D램 재고도 작년 4분기 대비 감소한 4~5주 사이클을 기록하고 있다. 성수기에 진입하는 2분기부터 서버 D램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은 가팔라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SK하이닉스도 지난 1월에 연간 실적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신규 데이터센

터 투자로 서버용 제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공급 측면은 업계의 공급량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돼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하이닉스는 D램의 경우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AI) 시스템 시장의 성장에 따라 고부가 제품 출하 비중을 늘리고, 낸드 플래시는 128단 서버용 SSD 고객 인증을 추진하는 등 제품 다각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블룸버그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칩 부족으로 자동차 회사들의 공장 가동까지 중단하면서 한국과 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계 경제의 의존 현상이 조망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가 작년 9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역량에서 대만과 한국의 비중은 각각 21.7%와 20.9%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3분의 2를 웃돌았다.

권태성 기자 tskwon@



제네시스 G80이 '2021 대한민국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사진제공 제네시스

제네시스 G80,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차’

종합 만족도 83.88점 획득

제네시스 G80이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2021 대한민국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4일 자동차기자협회는 “제네시스 G80이 종합 만족도 부문에서 83.88점(100점 만점)을 얻어 ‘2021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의 차 최종 심사에서는 총 10개 브랜드 21종의 신차가 치열하게 경쟁했다.

제네시스 G80은 핸들링 및 주행 감성

향목에서 9.37점(10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의 이노베이션에는 기아 쏠렌토의 ‘다중충돌방지 자동제동 시스템’을 선정했다.

올해의 수입차에는 BMW 뉴 5시리즈, 올해의 SUV에는 기아 쏠렌토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설된 올해의 유틸리티에는 기아 카니발을 선정했다. 이밖에 올해의 디자인과 퍼포먼스에는 포르쉐 타이칸이 2관왕을 차지했다. 올해의 그랜카에는 아우디 e-트론이 뽑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현대차-LG에너지, 코나 1兆 리콜비 합의

최종 비용 3대 7 분담할 듯
29일부터 8만여대 리콜 개시
시장 확대 위해 조기 타결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코나 RV 배터리 리콜 비용 총당금을 4대 6으로 쌓았다.

4일 양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실적에 코나 RV 배터리 리콜 비용 3866억 원을 반영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해 실적에 총당금 5550억 원의 비용을 반영했다.

이를 기준으로 리콜 비용은 총 9416억 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현대차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생산된 코나 EV와 아이오닉 EV, 일렉시티 버스 등 총 2만6699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코나의 경우 전 세계 리콜 물량이 약 8만2000

대에 달한다.

국내의 경우 리콜 대상은 △코나 EV 2만5083대 △아이오닉 전기차 1314대 △일렉시티(전기버스·LK EV) 302대 등 총 2만6699대다.

코나 전기차(EV)의 잇따른 화재 원인은 배터리 셀 제조 불량(음극 탭 접합)으로 인한 내부 합선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LG에너지솔루션 측과 1조 원으로 추산되는 리콜 비용 분담 협상을 진행해왔다.

앞서 현대차는 IFRS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781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전년 대비 22.9% 감소한 규모였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에 코나 리콜에 따른 품질비용 3866억 원이 반영되면서 지난해 전체 실적은 애초 공시했던 2조7813억 원(전년비 -22.9%)에서 2조3947억 원(전년비 -

33.6%)로 정정됐다.

LG화학 또한 이번 총당금 설정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3531억5900만 원에서 1조7981억5900만 원으로 줄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185.1%에서 117.8%로 감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은 소비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리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 양사가 분담하기로 협의했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총당금으로 4분기 실적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대손총당금 쌓은 비율로 보면 LG에너지솔루션과 4대6 정도로 돼 있지만 향후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현대차 입장에서는 최종 리콜비용을 LG에너지솔루션이 70%, 현대차에서 30% 정도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LG, 시각장애인 특화 ‘음성 안내서’ 도입

LG전자는 최근 원바디 세탁건조기 트롬 워시타워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화된 음성 안내서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시각장애인을 배려해 사용자가 직접 제품을 만지면서 도어를 여는 방향, 조작부나 버튼 위치 등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또 전원 버튼이나 세탁·건조 선택 버튼을 누르는 경우 등 제품의 작동 상황별 소리도 함께 안내한다.

이 음성 안내서는 서울특별시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서 공동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에 적용돼 있어 서울시 소비재 정보마당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국내 가전업체 중 처음으로 지난해 4월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LG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매뉴얼 제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LG전자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은



LG전자는 원바디 세탁건조기 트롬 워시타워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제품 조작부를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만든 스티커를 제공한다.

트롬 워시타워를 시작으로 물걸레 로봇청소기 코드 제로 M9 씽 큐, 디오스 식기세척기 스템 등 LG전자 가전제품 전반으로 음성 안내서와 점자 스티커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삼성, 5G·4G 동시 활용 ‘풀HD 영화’ 6초 만에 다운로드

업계 최고 속도 5.23Gbps 기록

삼성전자가 28GHz(기가헤르츠) 대역 5G 기지국과 4G LTE 기지국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중 통신(Dual Connectivity) 기술로 업계 최고 다운로드 속도를 기록했다.

4일 삼성전자는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28GHz 대역 5G 통합형 기지국과 1.9~2.1GHz 대역 4G LTE 기지국, ‘갤럭시 S20+’ 스마트폰 등 상용 제품을 활용해

5.23Gbps 다운로드 속도 시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4GB 용량의 풀 HD 영화 1편을 약 6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8GHz 대역 5G 통합형 기지국과 2개의 시험 단말을 활용해 MU-MIMO(Multi-User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시연을 진행해 하나의 단말에서 4.25Gbps 다운로드

속도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이를 경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동 통신사업자는 데이터 통신이 집중되는 강남역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에 5G 초고주파 대역 기지국을 설치해 효율적으로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사용자는 5G 서비스 초기 제한적인 커버리지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노우리 기자 we1228@

포스코 3사, 올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중복 지원 불가… 19일 마감

포스코그룹이 올해 상반기 채용에 나선다. 4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케미칼 등 3개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서류 접수는 19

일 마감하며 그룹사 간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포스코는 인·적성검사(PAT)와 1차,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접 일정은 추후 알릴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마케팅,

구매, 재무, 경영지원과 이공계 분야 생산 기술, 설비기술, 공정기술, 환경, 안전 직무 등이다. 근무지는 포항 및 광양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서류 및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AI 면접과 1차, 2차 면접, 4주간 인턴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포스코케미칼은 인·적성 검사와 1차,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주혜 기자 winjh@

코로나에도 수입차 ‘가속페달’

2월 국산차 판매 24% 증가할때
수입차, 33% 늘어 2만2290대
국내 소비자 ‘고급차 선호’ 반영

지난해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거둔 수입차 업계가 올해 들어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두 달 연속 2만 대 넘는 신차를 팔며 국산차보다 더 큰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수입자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 달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가 2만2290대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2월보다 33.3% 증가한 수치로, 역대 2월 판매량 중 최대치다. 올해 누적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만 대 이상 많은 4만4611대에 달한다. 1~2월이 자동차 업계의 비수기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실적이다.

국산차와 비교하면 수입차 시장의 흥행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두 자릿수 성장률이지만, 수입차 판매 증가율 33%에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국산차 업계가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생산과 판매를 하지 못해 지난달

실적에 기저효과가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수입차의 실제 성장세는 훨씬 커진다.

수입차의 인기에는 국내 소비자의 고급차종 선호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산 세단 중에서도 대형, 고급차종의 판매량만큼은 전년 대비 18.9% 늘며 유일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팔린 국산차 1대의 평균 판매금액도 3000만 원을 넘으며 전년보다 9.7% 높아졌고, 수입차 평균 판매금액도 5.9% 증가한 6300만 원대를 기록했다.

또한,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 모든 브랜드 판매가 정상화되고, 배출가스 스캔들 이후 규제가 강화된 경유차 대신 휘발유와 하이브리드 투입을 확대한 점도 수입차 판매 증가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가 5707대를 판매해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이어 △BMW 5660대 △아우디 2362대 △폭스바겐 1783대 △볼보 1202대 순이었다. 특히, 슈퍼카 브랜드 포르쉐는 지난달 912대가 팔리며 전년보다 103% 판매가 성장했다.

국가별로는 유럽계가 1만9098대 판매되며 85.7%를 차지했다. 일본계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1311대(5.9%), 미국계는

11% 감소한 1881대(8.4%)로 집계됐다.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 따른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GM, 포드, 폭스바겐, 토요타 등 주요 완성차 제조사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지난월부터 세계 공장의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차 업계는 3개월가량의 판매 물량을 미리 확보해 놓는 만큼, 이번 감소로 인한 영향도 일정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수입차 업계는 3월부터 코로나19 사태의 본격화로 해외 생산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며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 여파도 7월부터 나타났다. 이번에도 생산량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물량 확보 지연 등의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감산으로 인해 일정 부분 물량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반도체 수급 상황이 개선된다 해도 2~3개월 뒤에 정상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해진다. 한국 쪽에서는 마땅히 조치할 방법 없어 예의주시 중”이라 설명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삼성 세탁기 작동 카톡으로 한다

AI 플랫폼 ‘카카오’ 연동
음성명령·정보 알림 기능



삼성전자 모델이 카카오톡엔터프라이즈 스마트 스피커 ‘미니핵사’, ‘미니링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4일 카카오톡엔터프라이즈와 스마트홈 사업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요 스마트 가전 제품은 카카오톡엔터프라이즈의 인공지능(AI) 플랫폼 ‘카카오 i(아이)’와 연동된다.

소비자들은 ‘카카오 i’가 탑재된 △‘헤이카카오’ 앱 △‘카카옴’ 앱 △스마트 스피커인 ‘카카오미니’, ‘미니핵사’, ‘미니링크’ 등을 통해 삼성 스마트싱스(SmartThings)에 연결된 가전 제품을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헤이 카카오, ‘건조기 AI 맞춤’ 코스 실행해줘”와 같은 음성 명령을 내리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챗봇 대화를 통해 가전 제품을 작동하는 방식이다.

특히 세탁기의 세탁 종료 시점이나 공기청정기의 필터 수명 정보 등을 ‘알림’ 기능을 통해 전송받을 수 있다.

카카오 i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는 삼성전자 제품은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 4가지다. 올 상반기 내 에어컨, 에어드레서, 식기세척기 등 지원 제품을 추가할 예정이다.

박찬우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카카오와의 협력을 통해 삼성전자의 가전 제품 소비자들은 한층 편리한 스마트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커브드 디스플레이… K8 실내 공개

기아가 4월 K7의 뒤를 이을 새 준대형 세단 K8의 실내 디자인을 공개했다. 운전자의 시야를 넓게 확보하고 계기반 시인성과 각종 패널의 조작 성능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부분은 기아가 K8에 처음 도입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Panoramic Curved Display)’다. 계기반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두 개로 이어진 디스플레이는 서로 부드럽게 이어진다. 운전석에 최적화된 곡선으로 이어진 점이 특징이다. 운전자의 시선 이동을 최소화한 배려다. 대시보드 높이를 약 20mm 낮추고 좌·우 A필러 각도와 룸미러 모듈의 크기를 최적화했다.

사진제공 기아

한국조선해양, 세계 첫 수소선박 국제표준 개발 나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한국선급과 손잡고 수소선박에 대한 세계 첫 국제표준 개발에 나선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퍼스트타워에서 한국선급과 ‘수소선박 안전설계 규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세계 첫 수소선박 국제표준을 공동 개발하고, 2022년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출할 계획이다.

선박이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는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규정에 따라 건조돼야 하는데, 현재는 수소선박 관련 기준이 없는 상태다. 특히 가스선의 경우 일반 화물이 아닌 액화가스의 저장, 운송, 비상시 절차를 포함한 관련 규정(IGC코드, IGF코드)을 충족해야 하기에 표준 제정이 더욱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선해양은 첨단 기술력을 토대로 선박의 가스저장 및 연료공급시스템, 화물처리시스템 등 수소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조건들을 한국선급과 함께 검토한다.

이주혜 기자 winjh@

롯데, 택배비 올린다

CJ·한진도 인상 추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인상함에 따라 다른 택배사들도 택배비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소형(가로·세로·높이의 합 80cm 이하, 무게 5kg 이하) 택배 운임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택배 가격 조정표를 작성해 일선 대리점에 배포했다.

15일부터 적용되는 새 택배비는 크기와 물량에 따라 다르지만 상자당 평균 135원씩 인상되는 셈이다. 기존 고객은 계약기간까지 기존 단가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인상된 새 단가가 적용된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계약단가가 낮아 적자가 발생하는 고객사 500여 곳에 가격 현실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관계자는 “일부 저단가 고객에 한해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시니어 품격을 위한 인생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3월호 발매

COVER STORY

다시 쓰는 이력서

PART1 2020 통계로 보는 중장년 구직

PART2 재취업의 시작, 이력서

PART3 면접관의 눈길을 끄는 ‘말말말’

PART4職과 業을 만드는 시니어

PART5 30년 경력 판매하는 재능마켓

PART6 해외의 시니어 일자리

신라보가 만난 사람

전통 정원의 멋

담박한 정자 하나로 할 말 다하는 원림

슬기로운 연금생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의 모든 것

“세샹트리오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가수 권성희의 일과 삶

한 걸음 더 들어가 구축한 ‘개그의 제국’ 개그맨 전유성

한글레이스 그때 그 시절, 양경의 화려한 부활

하우징+ 우리 아파트 하자, 수리할까? 소송할까?

생활 속 법률 상식

시니어를 위한 상속 가이드

구해줘 부동산

펜트하우스의 세계

노린 여행

삼척 바닷가 마을 다이어리

‘정관왕 그리go’ 작은 미술관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8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비대면 바우처’ 부정행위 속출… 중기부 “무관용 대응”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 A사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수요기업에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했다. 지난 달 전체 공급·수요기업에 대상으로 부정행위 자진신고 받은 결과, A사로부터 노트북을 받았다는 12건의 신고가 접수돼 중기부는 수사를 의뢰하고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했다.

노트북 주며 “선정해 달라”

공급기업 9개사 수사 의뢰

선정 취소·사업비 환수 제재

부정행위 조기경보 강화도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현물을 제공(페이백, 리베이트)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구체적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 ‘선정 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 1개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는 서비스 상품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부정행위로 간주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수사 의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창업진흥원과 4개 운영기관(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했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대리 신청·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차단 기능을 추가했다.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도 의무화해 실제 서비스 활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후에 선정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했다. 또 바우처 지원 한도 400만 원에 일률적으로 맞춘 공급기업의 ‘가격 부풀리기’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유착 등 부정행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400만 원 내에서 수요기업이 1개 공급기업에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200만 원으로 낮춘다. 수요기업은 2개 이상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서비스 활용 의지가 낮은 기업의 바우처

는 조기에 환수해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제기한도 8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현행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도 강화한다. 플랫폼상의 수요기업 DB(데이터베이스) 분석 등을 통해 상시적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다. 100여명 규모의 국민모니터링단도 구성한다.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서비스의 특징점, 만족도, 가격 적정성, 불만사항 등의 체험 결과를 소비자와 보고서 형태로 플랫폼에 3월 말부터 등록·공개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지원금 일부가 판매 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새어나가게 하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식출범 “K콘텐츠 앞세워 글로벌 공략”

웹툰·음악·영상 등 해외로 ‘M·페이지’ 독립기업 체제



김성수 대표

이진수 대표

카카오페이지와카카오M이합병을마치고4일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공식출범했다.

김성수·이진수 각자 대표가 이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연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독보적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식재산(IP) 비즈니스 역량과 플랫폼 네트워크의 결합을 통해, 웹툰·웹 소설 등의 원천 이야기 IP부터 음악·영상·디지털·공연 등 콘텐츠 기획 제작, 글로벌 플랫폼 네트워크 등 엔터테인먼트 전 분야와 전 장르를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엔터 산업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톱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외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K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각자 대표 체제로 김성수 대표와 이진수 대표가

함께 이끈다. 특히 CIC(Company In Company, 사내 독립기업) 체제를 도입해 M컴퍼니와 페이지 컴퍼니로 구성된다. 음악·영상·디지털 등 콘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한 ‘M컴퍼니’를 김성수 대표가 맡게 되며, 이진수 대표는 웹툰·웹 소설 등 스토리 IP와 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한 ‘페이지 컴퍼니’에 집중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사업은 이진수 대표가 겸임으로 맡게 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CIC 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대표 직속으로 ‘시너지센터’를 신설한다. 시너지센터는 재무와 인사, 전략 등을 TF 형태로 운영하며, 각 사업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조직 구성원들의 안정적 융화 등을 담당한다.

이진수 대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전 콘텐츠 장르를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와 밸류체인을 구축했다”며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통해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으로 ‘티빙’ 본다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시청

CJ ENM의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티빙(TVING)이 네이버와 손잡고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결합상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CJ ENM과 네이버는 포괄적 협력을 위한 지분 맞교환에 합의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양사가 선보이는 첫 협업 사례다.

이날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들은 티빙 방송 VOD를 기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혜택에 ‘티빙 방송 무제한 이용권’이 추가된다. ‘티빙

방송 무제한 이용권’을 선택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들은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드라마 ‘빈센조’, 예능 ‘윤스테이’, 콘서트 ‘KCON:TACT 3’ 등 약 7만여 개의 tvN, JTBC, OCN 등 최신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티빙의 오리지널 예능 ‘여고추리반’, 드라마 ‘당신의 운명을 쓰고 있습니다’ 등 ‘티빙 오리지널’ 방송 콘텐츠는 서비스 출범 기념으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 티빙이 서비스 중인 1만여 편의 영화 콘텐츠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았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들에게는 티빙의 모든 콘텐츠를 초고화질로 즐길 수 있는 업그레이드 상품도 옵션으로 제공된

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4900원)에서 티빙 베이직 이용권은 3000원, 스탠다드 이용권은 6000원, 프리미엄 이용권은 9000원을 추가 결제하면 ‘여고추리반’ 등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와 티빙에서 제공 중인 영화 등을 모두 고화질로 볼 수 있다.

양지를 티빙 대표는 “이번 서비스 연동을 통해 티빙은 가입자 확보에 속도를 붙이고, 네이버는 멤버십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약 20개의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티빙 회원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은 기자 gogumee@

중진공·수출입銀, 수출초기기업 금융 지원

위기기업 정상화 뒷받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 4일 한국수출입은행과 수출초기기업 공동 지원과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공동 지원 등 수출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환율 변동 등으로 불안정한 수출 환경 속에서 더욱 취약한 수출초기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측은 우선 상호 금융 정보망 연계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와 수출입은행의 융자를 공동 지원한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융자기업에 중진공의 수출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해 수출 위기기업의 조기 정상화도 돕는다.

중진공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특히 중진공은 수출BI에 입주한 업체가 현지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선제적 자유통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한 경영위기 기업 지원에도 힘을 모은다. 중진공과 수출입은행은 위기기업에 구조개선계획 수립 비용과 신규대출,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을 파산·회생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해 기업 자체적으로 경영 정상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1년도 수출전망 및 정책과제 조사(2020.12)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들이 정부 중점 추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물류 애로 해소



김학도(오른쪽) 중진공 이사장과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4일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를 위한 지원(52.8%)이었고, 다음은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42.2%), 디지털 무역 활성화 지원(17.6%), 수출 보험 및 금융 지원 강화(16.8%) 순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이러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다각도로 강화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물류 운송·운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적해운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11월에는 수출초기기업의 수출 안전망 확보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국가 경제의 기초인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수출입은행과의 상호협력 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등 수출기업의 위기 탈출을 돕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안전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민 기자 kjm@

(주)LG 이수영·LG U+ 제현주 사외이사 선임

(주)LG는 이달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수영(왼쪽) 예코매니지먼트코리아홀딩스(주) 집행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수영 집행임원은 환경 서비스 회사인 코오롱에코원(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환경 분야 전문가로 경영 자문 역할을 한다.

LG유플러스는 벤처캐피탈인 옐로우독의 제현주(오른쪽)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한다. 제 대표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돕는 스타트업 투자 경험 등을 살려 기술과 산업 트렌드에 대해 자문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 LG전자, LG하우시스, 지투알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수경 숙명여대 환경디자인과 교수,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를 각각 여성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여성 사외이사 선임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법인의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한 내년 8월

적용될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이사회내에 ESG, 공정거래, 각 사업별 전문성 등을 갖춘 여성 사외이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LG는 올해 (주)LG, LG전자, LG유플러스, LG하우시스, 지투알 등 5개사가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내년에는 LG화학,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자산 2조원 이상 LG 상장사들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LG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지닌 여성 전문가들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반도체 슈퍼사이클’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8조 전망

연초 출시한 갤럭시S21 등 삼성전자의 세트사업이 실적 성장에 날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 주변에선 미국 오스틴(Austin) 공장 가동 중단 등에 따른 반도체 부진을 세트사업이 거뜬히 메울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기존 제품과 달리 S21은 1분기 출하량이 1100만대에 달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삼성전자 내 반도체 부문도 분위기는 좋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대장’ 실적·주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국제 메모리 가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예고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애초 기대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분기 영업이익 10조원을 회복하는 시기는 2분기라는 분석이 많다.

◇1분기 반도체 빈자리, IM이 살린다=4일 KB증권 등 증권업계에는 “1분기 갤럭시 21 출시에 따른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21% 늘어난 7400만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IM(IT·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은 3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투자는 1분기 출하

스마트폰 출하량 최대 7500만대… IT·모바일 부문 선전 기대
美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 반도체 주춤… “2분기엔 10조 클럽”

량이 7500만대로 전 분기 대비 20.4% 늘어나고, 평균제품가격은 27.1%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기간 휴대폰·태블릿·통신 장비 영업이익 전망치는 4조700억 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분위기면 올해 IM부문 ‘100조·영업이익 10조’라는 자존심도 다시 회복할 전망이다.

관심은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조 클럽’에 가입하느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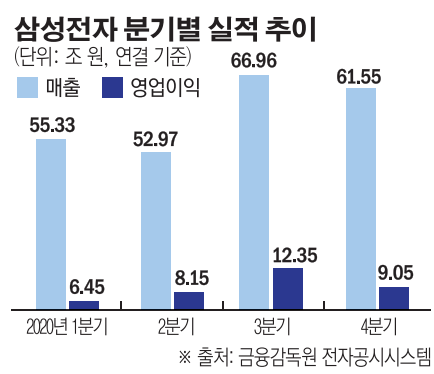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추정치)는 8조4747억원이다. 하지만 최근 증권사들은 잇달아 전망치를 올려잡고 있다. KB증권은 스마트폰(IM)을 제외한 전 사업부 실적이 감소하며 매출액 62조8000억원, 영업이익 8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나금융투자는 8조2700억 원에서 8조9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8조3160억 원을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1분기 반도

체 부문은 메모리(DRAM, NAND)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신규 팹(공장) 초기 비용 증가와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시스템 반도체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분기 휴대폰·태블릿·통신장비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3조2200억원)보다 늘어 4조7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시스템 반도체 영업이익이 1900억 원에서 1160억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반도체의 부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분기 영업이익 10조, 반도체가 이끈다=1분기 영업이익 ‘10조 클럽’ 달성은 어렵다는 분위기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의 가동 중단 상황이 길어진 영향이 컸다. 그러나 2분기 ‘10조 클럽’ 달성은 무난하다는 전망이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KB증권이 10조1000억원, 하나금융투자가 9조3080억원, 신한금융투자는 9조



8350억원으로 예상했다.

D램 메모리 반도체 협회의 판단 기준인 D램익스체인지 인덱스(DXI)가 사상 최고치인 3만3748.46(지난달 26일)을 찍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3년 전보다 더 광폭으로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DXI 종전 최고점은 2018년 1월 2일의 2만9735.32였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정보기술(IT) 산업의 호황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장기론의 1차 근거다. 메모리 3대장이라 할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설비투자에 보수적으로 나서는 것도 장기 호황론에 힘을 실어준다.

D램익스체인지의 모회사이자 반도체 시장조사기관인 트랜스포스는 “서버 D램

이 2분기에만 10~15%, 올 한 해 연간으로는 4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최신 보고서에서 예상했다. 이는 당초 8~13% 인상(2분기)에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서버 등의 장기 데이터 저장장치로 쓰이는 낸드플래시 가격은 이르면 올해 1분기, 늦어도 하반기에 가격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D램 가격 상승은 2021년 연중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온라인교육, 재택근무 등 늘어난 비대면 수요에 PC와 서버 판매도 함께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10조 원대를 회복할 전망이다”이라며 “특히 올해 D램 공급 부족 전환에 따른 가격상승 영향으로 반도체 영업이익은 28조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10조 원의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주주환원 정책 기간(2021년~2023년) 내에 의미있는 규모의 M&A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헤림 기자 wiseforest@

진단키트 업체, 신성장동력 찾기 분주

“단일 분야로는 기업가치 유지 어려워”… 인수합병 전문가 영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혜를 톡톡히 누린 진단기기 업체들이 인수합병(M&A)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신성장동력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씨젠, 랩지노믹스 등 진단기기 전문기업은 인수합병 분야 전문가,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등을 내부 인사로 선임했다.

지난달 씨젠은 박성우 대림산업 전 CFO를 총괄부사장으로 영입하며 인수합병으로 사업 다각화 경로를 찾겠다고 밝혔다. 박 부사장은 국내외 기업의 인수합병, 자금조달 등을 30년 이상 진행한 인수합병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이어 김범준 KT 전 CFO도 씨젠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재훈 한화투자증권 전 연구원은 랩지노믹스에 대해 기업보고서를 내다가 아예 자리를 옮겼다. 현재 랩지노믹스의 CFO로 재직하고 있다. 주력 분야인 진단기기 부문에서 확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과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랩지노믹스는 지난해 자본금 100억 원 규모의 바이오벤처캐피탈(VC) 전문 자회사 리드컴파스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기도 했다. 해당 회사를 통해 신약개발 등 본격적인 벤처기업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던 진단기기 기업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을 기점으로 지난해 최고 몸값을 누렸다. 기업구

모가 커지자 진단키트 단일 포트폴리오로는 현재 기업가치를 유지하는 게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인수합병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유망기업을 인수할 총알 역시 두둑하게 쌓여둔 상태다.

씨젠 측은 “지난해 기준 현금성 자산은 3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수합병 전문 인사를 영입해 바이오·IT를 융합한 사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인수합병 기업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진한 주가 흐름 역시 인수합병 성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씨젠 주가는 지난해 8월 최고 32만 원에서 최근 12만 원대로, 같은 기간 랩지노믹스 주가는 5만 원 후반에서 1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태다.

이인아 기자 ljh@

증권업계, 중개형 ISA 유치 경쟁 ‘후끈’

개인 자산관리시장 진출 교두보

증권사들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주식 매매가 가능해진 ‘중개형 ISA’는 사실상 증권사가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연금시장까지 선점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투자자로서도 배당주식에 투자하거나, 상장지수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면 ISA를 통한 거래가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 삼성증권에 이어 세 번째로 ‘중개형 ISA’ 서비스에 뛰어들었다.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 다른 대형증권사들도 ISA 중개형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형 ISA’는 올해 세제개편으로 등장한 새로운 절세계좌다. 기존 일임형·신탁형 ISA와 달리 고객이 직접 주식을 매매하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비대면으로도 가입과 거래를 할 수 있다.

ISA의 ‘절세’ 매력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5년 동안 돈이 묶여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 3년으로 줄었다. 또 소득이 없는 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최대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증권업계가 ‘중개형 ISA’ 도입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은행이 점유하던 개인 자산관리 시장에 증권업이 진출하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ISA 가입자의 92%는 은행 고객이다. 중개형 ISA를 통해 증권업계의 점유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개형 ISA는 주식 거래가 가능해야 하므로 사실상 증권사 독점상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ISA 계좌가 연금계좌로 전환이 가능해지고, 세제 혜택까지 주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증권업계는 연금고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0조 원의 퇴직연금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증권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ISA 계좌 유치가 곧 연금계좌 유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문성근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차장은 “중개형 ISA는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주식 배당소득세를 일정 범위에서는 면제받을 수 있어서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eom@

금융위 “소수점 매매, 규제특례 검토”

소득무관 우량주 투자기회 제공

금융당국이 주식 1주가 아닌 0.1주 단위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소수점 매매’에 대해서 “규제 특례를 검토해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내투자자가 8만 원이 아닌 8000원으로도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커피 한 잔 값으로 1등 주식 골라담기’ 토론회에서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해외주식의 소수점 매매 방식이 샌드박스 규제에 들어온 것처럼 정부가 조금 더 공부해서(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도) 여러 투자자가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수점 매매 도입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부터 개인투자자의 주식 참여가 증가한 영향이다.

게다가 개인투자자들은 대형주보다 중소형 저가주를 주로 매수해 큰 수익을 내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2019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62.4%로 해당 기간 코스피 상승률(37.1%)을 웃돌았다”면서 “반면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코스피 소형주는 25.4% 오르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의 소수점 매매를 활성화하면 재산, 소득 상관없이 대형 우량주에 투자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유도할 수도 있다”면서 “소수점 매매제도는 투자의 대중화, 국민 재산증식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변 과장은 소수점 거래가 공유형 경제의 하나로 봤다. 최근 미술품을 공동구매하고, 부동산도 분할소유를 할 수 있듯이 하나의 주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스템은 물론 법적 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게 문제다.

변 과장은 “현재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도 7~8개 증권사에서 도입을 희망하고 있고, 국내 주식에서도 여러 증권사가 소수점 매매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e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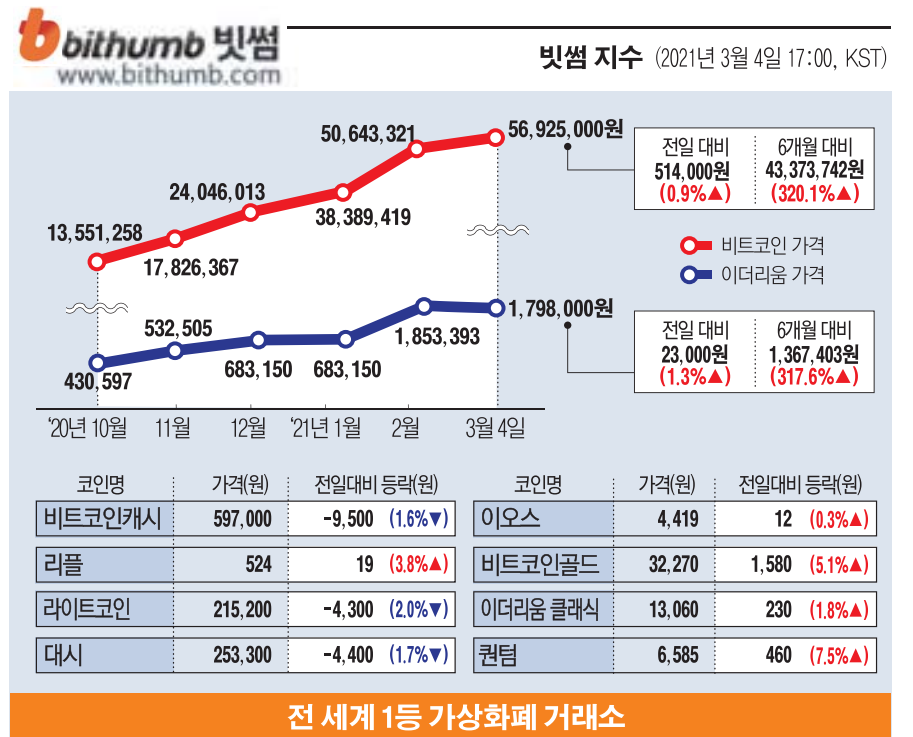


NH투자증권, ELS 8종 모집

NH투자증권은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 8종을 5일 오후 1시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ELS 20624호는 발행 후 6개월 조기상환 조건이 85% 이상이면 상환되는 조기상환추구형 상품이다. 에스엔피500지수(S & P 500), 유로스톡스 50 지수(EuroStoxx50), 코스피200지수(KOSPI200)를 기초자산으로 한 만기 3년 상품으로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저기준가격 대비 85%(6, 12, 18개월), 80%(24, 30개월), 75%(36개월) 이상이면 연 4.50%(세전)의 수익을 지급한다.

ELS 20627호는 해외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 손영지 기자 eom@



〈공수처장〉

〈불법 출국금지 의혹〉

김진욱 “‘김학의 사건’ 수사 여부 내주 결론”

“공수처, 능력 없는 상황 아니다”
1호 사건 삼아 직접수사 가능성
檢 아닌 경찰에 재이첩할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서 이첩한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학의 사건 관련 자료가 도착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주말까지 검토해 내주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사건 기록을 공수처에 넘겼다.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기 전까지는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김 처장은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며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기록에 답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도 아니다”며 사

실상 ‘1호 사건’으로 삼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열어 뒀다.

특히 김 처장은 “사건 재이첩과 직접 수사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3의 방법을 거론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공수처장

이 판단한다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른 수사기관’에는 경찰도 포함된다.

김 처장은 “상식적으로 피의자가 검사면 경찰에 이첩하고 고위 경찰이면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다 할 수 없으니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 규모와 내용에 비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게 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3일 경찰청을 방문한

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동시에 수사를 벌이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김종용 기자 deep@



김명수 대법원장 “저의 불찰로 실망 안겨” 사과

김명수(왼쪽)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에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격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난해 5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상황과 관련 거짓 해명을 했던 것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에게 사과했다.

김명수(왼쪽)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에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격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난해 5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상황과 관련 거짓 해명을 했던 것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에게 사과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가벼운 접촉사고 후 뺑소니 대법 “가중처벌 대상 아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라도 피해자 구호조치가 필요없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도주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상태 중이던 A 씨는 2019년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여수시 한 도로에서 맞

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스치듯 부딪혔다.

1심은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 고의성은 없다”며 특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도주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사고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까지 모두 이행해야 하는데 가해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사고 장소를 떠났다”며 특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특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구호 조치가 필요가 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나경민 기자 contest@

서울 기간제 교사도 출산·가족수당 혜택

올해부터 서울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처럼 각종 수당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규 교원(일반직·교육전문직 포함)에게만 제 공하던 맞춤형 복지 혜택을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에게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는 기본복지수당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출산 축하수당으로 나뉜다.

기본복지수당의 경우 정규 교원은 연간 70만 원을 받았지만 기간제 교사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이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기간제 교사에게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기본복지수당이 지급된다. 근속수당(최대 30만 원)도 1년 미만 기간제 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기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가족수당은 연간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만 원, 부모·형제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5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의 경우 첫째는 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 이상은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출산 축하수당도 올해부터는 정규 교사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에게도 지급된다. 해당 수당은 둘째 자녀를 낳으면 200만 원, 셋째 이상을 낳으면 300만 원씩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복지 차별은 대부분 사라졌다”며 “기간제 교사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차별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호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장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매력에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뜸전성식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알고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충알고 실전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Q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전 대충알고, 후속한 성장설계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대사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발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적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람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정책, 제도적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999원 (지름 / 200쪽 / 국문판권 / 2114.80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을 읽는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함은 물론, 깊이 있는 읽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발견한다.

이정호 지음 / 230쪽 / 4400원 / 2115.8000원

소탈함 묻어나는 산중 별서



대쪽 같은 선비의 삶 닮았네

안동 '만휴정'

산 아래 마을을 지나 언덕을 오르자 이내 숲속이다. 밋밋한 야산이지만 솔이 지천이라 푸르다. 길 오른편으로는 얼어붙은 도랑이 이어진다. 그러다 순식간에 풍경이 바뀐다. 웅글차고 미끈한 바위들이 계곡을 채운 게 아닌가. 송암폭포 일원이다. 바위 벼랑에도, 소(沼)에도 얼음장이 두꺼워 고적한 정취를 자아낸다. 해빙이 되고 봄비 내리면 물은 날듯이 활개를 치리라. 소쿠라지는 폭포 소리로 후련하리라. 기차게 변전하는 산중의 사계를 두고 탄 데에 원림(園林)을 둘러보나. 고릿적 선비들은 산을 좋아해 산에서 노닐기를 관습으로 삼았다.

작디작은 별서를 만든 건 여기가 허허롭게 사는 이의 피안이란 뜻인가. 만휴정(晩休亭)은 계곡 옆 둔덕에 마냥 소탈한 품새로 들어앉아 있다. 있으나 없는 것처럼 티끌 없이 고요하다. 정갈한 고로(古老)의 반쯤 감긴 눈매처럼 그저 잠잠하다. 세상과 동떨어진 정적과 고독이 짙어 가슴으로 스며드는 풍경이다. 초목이 길차게 우거졌으나 서늘한 겨울 숲엔 새소리도 그쳤다. 부질없이 번잡한 건 사람의 속기일 뿐. 여기에서 속세의 먼지를 털어냄직하다. 조선 전기의 문신 보백당 김계행(金繼行, 1431~1517)이 만년을 누린 원림이다.

원림에도 유형에 차이가 있고 투자에 격차가 있다. 은근한 차례로 슬쩍 자랑하는 원림이 있는가 하면, 담박한 성정을 담은 정자 하나로 할 말 다하는 원림이 있다. 만휴정은 후자의 전형이다. 몇몇 선과 면으로 조촐하게 그린 먹그림을 닮았으니. 그러나 성정의 경향만 좇아 지었으랴. 주변 산천의 형세와 스케일을 가늠하는 심미안 역시 건축의 주춧돌로 쓰였다. 자연 풍광이 제법 빼어나니 덧칠이야 허세로 여겼을 테고, 비좁아 웅색한 골에 큼직한 원림을 꾸릴 수는 없는 일이라 순리를 따랐다.

계곡 위로는 다리가 놓여 있다. 만휴정 출입문과 골짜기 이어지는 다리로 후대에 가설했다. 세 뺨 남짓한 비좁은 다리지만 광복의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요리에 견주자면 에피타이저? 풍경을 보는 눈에 포인트가 담기며 구미를 촉발하기 때문이다. 저 위편으로는 입이 떡 벌어지도록 널찍한 너럭바위가 보인다. 이 거대한 바위의 위용으로 숲도 덩달아 묵직한 위엄을 머금은



조선 전기 문신 김계행의 정자 출입문 잇는 좁은 다리에 서면 단아하고 고요한 풍경에 매료

“우리집 보물은 오직 ‘청백’ 뿐”
넌더리 나는 벼슬 버리고 낙향
속세 먼지 털어낸 은자의 낙원

다. 만휴정이 피안이라면, 다리를 건너는 일은 속세와 결별하는 여정인가. 그리고 보면 단아해서 아름답고 고요해서 심원한 만휴정의 모습을 선계의 기적이라고 말할 것도 없겠다.

흘처마에 팔작지붕을 얹은 만휴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이루어졌다. 초창 이래 중수와 보수가 거듭됐으나 조선 후기의 건축 양식이 일부 남아 있다. 전면 전체를 개방해 툇마루로 처리한 대목은 흔치 않은 양식이라더라. 누각의 3면을 두른 계지각 난간과 창방 위에 올린 연꽃 화반의 조각에도 공들인 흔적이 완연하다. 아무려나 곱상하게 잘 늙은 집이다. 산야에 피고 지는 꽃들, 산 위로 모이는 별들, 계곡으로 흐르는 달빛을 다 볼 수 있으니 덧없는 세상이야 까먹은 셈치고 숨어 살기 좋은 집이다.

김계행이 이곳에 머물기 시작한 건 일흔 살에 접어들 때였다. 넌더리 나는 벼슬을 버리고 낙향, 장인인 남상치의 별서였던 쌍청헌(雙淸軒)의 옛터에 만휴정을 조성하고서였다. 김계행은 명민한 재목이었으나 이채롭게도 50세에 이르러서야 식년시에 붙어 벼슬살이를 시작했다. 벼슬

에 나아가기 전의 긴 세월을 주로 ‘열공 모드’로 정진했다. 따라서 학문이면 학문, 수신(修身)이면 수신, 어느 면에서든 그를 능가할 이가 드물었다. 점필재 김종직과 함께 영남 유림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이지 않은가. 처신은 칼칼하고 운신은 꽃꽂이 조정대고 쏘아붙인 직언도 잦았다. 배울 만큼 배운 자가 지닌 투명한 정신의 발현이었다. 그랬으니 치고 들어오는 ‘안티’와 잠정적인 짐들도 필연이라 부침이 자심했다.

김계행의 인품을 짐작케 하는 일화가 있다. 젊었던 날의 그에게 집안의 장조카로 궁궐의 실력자였던 학조대사가 찾아왔다. 학조는 김계행에게 왕실에 줄을 대줄 테니 중앙 관직으로 나아가라 했다. 이에 격분한 김계행이 학조의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회초리로 후려쳤다. “정탁으로 벼슬을 살라고? 우리 집안의 정신이 겨우 그 정도더냐?” 이렇게 막 뿌리지는 기개로 청정했으니 미혹이 침범할 틈이 없었을 테다.

“우리 집엔 보물이라곤 없지만, 오직 청백(淸白)만이 보물이다.” 이는 김계행이 일찍부터 계승처럼 읊조린 삶의 나침반이었다. 그를 청백리의 표상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던 걸 보면 언행일치에 차질이 없었던가 보다. 이쯤에서 만휴정의 저 화장기 없는 매무새의 행간을 다시 읽게 된다. ‘청백’의 개결한 심지로 안분지족한 자연옹(自然翁)의 뜻을. 은자는 무욕으로 세상과 세월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무시무시한 무적함대다.

글/박원식 객원기자 tititoto@hanmail.net

사진/주만욱 프리랜서

minwook19@hanmail.net

[답사 Tip]

경북 안동시 길안면 목계리에 있다. 만휴정에서 북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는 목계종택이 있다. 김계행이 살았던 고택으로 한옥 체형 숙박을 할 수 있으며, 종택 옆엔 목계서원도 있다.

하나금융그룹

Green + Digital

뉴딜 투자, 글로벌하게 하나로~ 담자!



K-뉴딜을 넘어 '글로벌 뉴딜' 투자로!

하나뉴딜글로벌테크랩 V4

*주요 투자 테마

그린 뉴딜 + 디지털 전환

(친환경차, 2차전지, 그린에너지 등 + 5G,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 글로벌 투자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테마
투자포인트 「그린 &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해외주식에 집중 투자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랩 수수료 • 선취형: 선취 1.0%, 후취 연1.5% • 성과형: 후취 연1.5%+성과보수(고객과 별도 합의)

[투자자 유의사항] *당사는 본 랩이카운트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랩이카운트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랩이카운트는 고객계좌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으로 계좌별 운용실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거래 중개회사 및 해외 거래소에 지불하는 비용이 고객에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본 비용은 해당 거래소 및 중개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0290호(2021.01.21~2022.01.20), cc브랜드210121-0151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투자

“SK가 창출하는 사회적가치 베트남에 알려요”

SK에너지 ‘베트남 TF’ 안젤라 원·부티짱 매니저

각각 사업개발·대외협력 맡아 ESG 경영활동 전파 힘쏟아
“안면기형 수술·맹그로브 숲 복원사업 듣고 저희도 놀랐죠”

“SK가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에 대해 베트남 사람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어요.”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전문 보도채널 ‘스키노뉴스’에 올린 SK에너지 ‘베트남 TF’ 소속 안젤라 원 선임매니저와 부티짱 매니저의 인터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 선임매니저는 SK에너지 베트남 오피스에서 사업개발을, 부티짱 매니저는 대외협력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으로 SK이노베이션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을 베트남에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부티짱 매니저는 SK에너지 구성원으로 서 자신의 목표에 대해 “SK의 이야기를 베트남 사람들에게 더욱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SK그룹은 다수의 베트남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여전히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이름”이라며 “SK그룹이 1996년부터 안면기형이 있는 베트남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수



SK이노베이션이 함께하는 ‘베트남 사회적가치 얼라이언스’를 대표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맹그로브 묘목 식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술을 지원해 왔고 SK이노베이션이 주도해 설립한 ‘베트남 사회적가치 얼라이언스’를 통해 베트남 남부 지역의 약 70ha(헥타르) 규모에 달하는 맹그로브 숲이 복원됐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은 SK이노베이션이 ‘그린벨런스 2030’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ESG 활동의 하



베트남 호찌민시에 위치한 SK에너지 베트남 오피스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티짱(왼쪽)과 사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젤라 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나다. 그린벨런스 2030이란 기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더 나아가, 친환경 사업 모델 개발로 악영향을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베트남 짜빈성(省) 지역에 맹그로브 묘목을 심는 활동을 시작했다. 매년 규모를 확대하며 맹그로브 묘목 식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19년 말까지 총 40ha에 약 16만여 그루의 맹그로브 묘목을 심었고, 지난해에는 30ha에 걸쳐 18만 그루를 심었다.

또한, 부티짱 매니저는 SK그룹이 베트남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국가혁신센터

(NIC)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SK와 SK가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에 대해 베트남 사람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바지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K에너지의 베트남 사업을 담당하는 원 선임매니저는 “(SK가) 베트남에서 더 많은 M&A(인수·합병)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SK그룹이 베트남 국민,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본사 구성원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금융위, 첫 여성 총괄과장 탄생
금융산업국 은행과장에 김연준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여성 인력을 전진 배치했다. 최초의 여성 총괄과장이 발탁됐고 핵심 정책부서에서도 2명의 여성과장을 임명하면서 여성 간부 인력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4일 여성 간부들을 핵심 자리에 전진 배치하는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산업국의 총괄과장(선임 과장)인 은행과장에는 김연준(사진) 공정시장과장이 발탁됐다. 금융위 총괄과장을 여성이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선임 과장은 행시 44회 출신이다. 이외에도 핵심 정책부서에 여성 과장들을 전진 배치해 금융위 내 여성 간부 인력을 강화했다. 서민금융과장에 이석란(행시 44회) 금융시장분석과장, 가계금융과장에 권유이(행시 45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각각 선임됐다.

김범근 기자 nova@

자동차기자協 ‘올해의 자동차인’
김세훈 현대차 부사장 선정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개발 주역으로 꼽혀온 김세훈(사진) 연료전지사업부 부사장이 ‘올해의 자동차인’ 산업 부문 혁신상을 받았다.

4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2020 자동차인 시상식’을 개최, 4개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산업부문 혁신상에 이어 공로상은 오랜 기간 자동차 산업 분야를 연구한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이 수상했다. 홍보부문은 광운대 상용자동차 홍보팀장과 양재의 프레임글로벌 부장이 각각 수상 의 영예를 안았다.

김준형 기자 junio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강병삼 前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자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강병삼 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을 임명한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강 선임 이사장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3.8억 전달

부영그룹이 설립한 재단법인 우정교육문화재단은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들에게 1학기 장학금으로 약 3억8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36개국 95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올해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약 3억8000만 원 규모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08년 설립한 우정교육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1933명의 유학생에게 총 75억 원이 넘는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취임 첫 일정은 한국노총 방문



이동근(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신임 상근부회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지난달 말 취임한 이 부회장의 첫 공식 행보이자 상견례 자리였지만 현안에 대한 견해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경총의 행보에 대해 “갈등을 유발한다”고 반발했고, 경총은 “노조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법안으로 인해 경영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사진 연합뉴스

20분 만에 65억원 번 머스크 아내

가수 그라임스, 암호화기술 NFT 적용 디지털 그림 10점 팔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사진)가 디지털 그림을 경매에 내놔 20분 만에 65억 원을 벌었다. 그라임스의 대박 뒤에는 신종 디지털 자산 NFT의 인기가 자리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그라임스는 최근 ‘위 님프’라는 제목의 디지털 그림 10점을 온라인 경매에 내놔다. 이 작품은 화성을 수호하는 날개 달린 아기 천사 등 가상의 이미지에 그라임스의 노래가 배경으로 깔렸다. 20분 만에 580만 달러(약 65억 원)에 낙찰됐다.

그라임스의 디지털 그림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끄는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 토큰)’ 기술이 적용됐다. NFT는 비트코인처럼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이지만, 자산에 개별적인 인식 값을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가상화폐는 실제 화폐처럼 코인 1개당 가치가 서로 똑같지만, NFT는 개별 가치를 다르게 책정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NFT가 적용되면 각 코인은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인식 값을 갖게 돼 코인마다 가격이 달라진다.

영상에 NFT를 적용하면 원본 영상에 인식 값이 부여돼 인터넷상의 사본과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곳저곳에 퍼날라지며 원본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디지털 작품에 희소성을 더할 수 있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디지털 그림이나 영상, 게임 아이템 등을 거래할 때 NFT가 적용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최혜림 기자 rog@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김문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정민 △예산총괄과장 박창환 △예산정책과장 김태곤 △예산관리과장 강병중 △고용환경예산과장 장보영 △교육예산과장 권준각 △문화예산과장 남동우 △총사업비관리과장 김장훈 △국토교통예산과장 허승철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김위정 △농림해양예산과장 이성원 △연구개발예산과장 정유리 △정보통신예산과장 박정현 △복지예산과장 장운정 △연금보건예산과장 박재형 △안전예산과장 김유정 △법사예산과장 박호성 △행정예산과장 한재웅 △지역예산과장 강준모 △국방예산과장 장승대 △방위사업예산과장 정동영 △조세분석과장 최영진 △조세법령응용과장 황인웅 △금융세제과장 양순필 △신규제조세규범과장 김태정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조용래 △관세세제과장 이호섭 △관세협력과장 염경운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영현 △물가정책과장 김승태 △지역경제정책과장 박지훈

△인구경제과장 나운정 △계약정책과장 손창범 △혁신조달기획과장 정기철 △재정전략과장 임영진 △재정건전성과장 이지원 △민간투자정책과장 김준철 △공공정책총괄과장 고재신 △평가분석과장 유형선 △경영관리과장 김정에 △국제금융과장 김동익 △외화자금과장 오재우 △외환제도과장 심현우 △금융협력과장 조현진 △다자금융과장 이준범 △대외경제총괄과장 최지영 △국제경제과장 이종훈 △통상조정과장 서규식 △경제협력기획과장 장의순 △개발금융총괄과장 지광철 △국제기구과장 윤정인 △북권총괄과장 최병완 △발행관리과장 이종수 △기금사업과장 허진 △재정정보과장 임현정

◆고용노동부 ◇실장급 승진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대환 △국장급 전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규석

◆여성가족부 ◇과장급 인사 △운영지원과장 조민경 △여성정책과장 김가로 △청소년정책과장 이남훈 △권익정책과장 조용수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행정인사

과장 선욱 △금융소비자정책과장 홍성기 △서민금융과장 이석란 △금융시장분석과장 이수영 △산업금융과장 김성조 △기업구조개선과장 신상훈 △보험과장 이도엽 △금융혁신과장 박주영 △위원장 비서관 고영호 △코로나19 긴급대응반 녹색금융팀장 윤현철 △은행과장 김연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과장 김효신 △기업회계팀장 송병관 △가계금융과장 권유이 △공정시장과장 박재훈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신장수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조충행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 조문희 △정책홍보팀장 이동욱 △의사운영정보팀장 정현직 △금융안정지원단 금융지원과장 김정명 △금융안정지원단 산업지원팀장 이진호 △코로나19 긴급대응반 뉴딜금융과장 전수한

◆한국디지털페이먼트 △신규 선임 △부사장 오영준 △상임고문 백기웅

◆EBS △방송제작본부장 남선숙

◆다원일보 △논설위원 변평섭 △논설위원 황환택 △경기취재본부장 김형운 △충남·대전·세종 총괄과장 강철호 △충남·대전·세종 지사장 장영재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동서대 객원교수
전 주핀란드 대사

한-미 간 전작권 역사를 보면 1978년 유엔사령관에게 맡겨진 전작권이 연합사 사령관에게 넘어갔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문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승만으로부터 받은 전작권을 정확히 무슨 근거, 조건, 절차로 넘겼는지 알 길이 없다. 먼저 1978년 전작권 관련 문서가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2014년 전작권 전환 조건이 비현실적이라면 한미가 협의해서 고쳐야 한다.

요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세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었는데 다음 대선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아 뭔가 중대한 결정이 임박했을 수 있다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김정은-트럼프 회동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환을 위한 점검 작업을 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작권 전환 논의의 핵심은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에 관한 것이었다.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이 충족되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것들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세 번째 조건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안보 환경'은 너무 모호해서 판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조건이 그러하다 보니 논의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흐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가 당면한 안보과제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문제가 정치화, 이념화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거기에 더하여 미국이 전환을 가능한 한 미루려 한다거나 전환 후에는 유엔사를 이용하여 사실상 전

작권을 계속 행사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미국대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고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가 조건을 무시하거나 억지로 껴맞추어 서둘러 전환하려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면 사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아 두고두고 동맹 간에 분란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어두운 정치적 상황이 있었고 안보 관련 사안을 다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국력 수준이 그런 비밀주의나 편의주의를 용인하지 않는다. 정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결정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고 그 결과는 우리의 국익을 저해할 뿐이다.

전작권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4일 자 서한으로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맡겼다. 이 서한에서 이승만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맡기는지를 명확히 했다. 이승만의 서한은 친애하는 맥아더 장군으로 시작하며 크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둘 다 긴 복문으로 되어 있어서 문장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기는 간단치 않

다. 그러나 의미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을 대신하여(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싸우고 있는 유엔군의 최고사령관으로 지명된 맥아더에게 대한민국 군대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현재의 적대적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맡긴다(assign)고 하고 있다.

이승만의 서한은 의미 전달과 어휘 선택에 있어서 명료하고 적절하였다. 우선 서한의 본문에서 미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엔군이 한국을 대신하여 싸우고 있다고 함으로써 유엔군과 한국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규정하였다. 또한 유엔군의 최고사령관으로 지명된 맥아더에게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맡긴다고 함으로써 한국군의 지휘권을 맡는 맥아더의 지위를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맥아더에게 지휘권을 'assign'한다고 한 것도 탁월한 언어 선택으로 보인다. 영어 단어 'assign'은 임무, 과제 등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유엔군의 사령관으로 지명된 군 장성에게 현재의 적대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일시적으로 맡긴 것이다. 비록 참략을 당하여 유엔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지만 주권국가의 국가원수와 국제기구의 이름으로 구성된 군

의 지휘관 간의 관계를 질서 있게 표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 서한을 통하여 우리는 최초 전작권이 넘어간 저간의 사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게 된다.

한-미 간 전작권 역사를 보면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유엔사령관에게 맡겨진 전작권이 연합사 사령관에게 넘어갔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문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승만으로부터 받은 전작권을 1978년 당시 유엔사령관이 정확히 무슨 근거, 조건, 절차로 연합사령관에게 넘겼는지 일반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전시작전권은 제복을 입은 우리의 딸 아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이런 권한을 움직이는 문제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1978년 전작권 관련 문서가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2014년 전작권 전환 조건이 비현실적이라면 한미가 협의해서 고쳐야 한다. 비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가 허망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환 후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만 무성할 게 아니라 한-미가 협의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정확'과 '투명'은 민주국가 간의 동맹인 한미동맹에 독이 아니라 약이다.

윤기영의 미래토크



한국외국어대 경영학부
미래학 겸임교수

실감경제(immersive economy)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에서 실감경제 육성을 위해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실감경제는 가상, 증강, 혼합 및 확장현실 기술의 기기 등의 직접 시장, 이들 기술을 응용한 시장과 경제 등을 의미한다. 실감경제는 제조산업에서 콘텐츠 산업까지, 교육에서 도시구조까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간의 소비가 곧 경험임을 생각하면, 실감경제는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상현실 기술 등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 가격은 비싸고, 화소와 시야각(FoV, Field of View)은 부족하며, 배터리는 수명이 짧고, 컨트롤은 불편하고 완전하지 않으며, 콘텐츠 개발 비용은 지나치게 비싸다. 180도의 시야각을 자랑하거나, 확장현실 공간 안에서 계기판과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화소 수를 가진 기기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가격이 XTAL은 800만 원, 바르요(Varjo) VR-3는 400만 원을 넘는다. 그것도 시야각이 180도이면서 화소 수가 인간의 나안 수준인 기기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비용은 기존 방식보다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며, 표준화가 진행되지 않아 기기별로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할 위험도 있다.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는 2020년 실감경제에 대해 "2020년은 아니라 하더라도, 2030년 안에는 충분히 성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각 기업은 실감경제를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일단 가상현실 등 기술의 발전이 지수적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중적인 기기를 기준으로 화소 수가 2016년 한쪽 눈에 100만 화소였는데, 2018년 200만 화소 2020년 400만 화소로 2년에 2배씩 증가했다. 애플은 2022년 한쪽 눈에

3300만 화소의 가상현실 기기를 출시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이것이 실현되면 2년 만에 8배가 증가하는 셈이 된다. 페이스북은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인간의 손을 그대로 인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삼성은 증강현실 안경에서 별도의 도구 없이 손만으로 키보드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개념을 선보였다. 정부와 기업은 실감경제에 대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관련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때 미래예측 기반의 쓰임새를 접목한 정보통신 표준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여기에 미래예측 기반의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을 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감 콘텐츠 개발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대기업은 실감경제와 관련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실감경제와 관련한 트렌드 레이더 맵을 작성하고 이에 대응한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

사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 내부 임직원이 린 캔버스(lean canvas)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애자일(agile)로 개발하고 린 스타트업(lean startup)을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실감경제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사전에 개발해야 한다. 사물통신과 증강현실의 결합, 증강현실 안경 기반의 마케팅 및 정보 제공, 메타버스 내에서의 플랫폼 비즈니스, 아바타 성형 서비스, 고객경험과 실감경제의 융합, 실시간 가상현실 관광 등 잠시만 생각해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상상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아야 한다. 강조하건대 비즈니스 모델을 상상하는 데는 돈이 거의 들지 않으므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타령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실감경제가 본격화할 날이 멀리 보이지만 그렇게 멀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야 한다. 지금은 상상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다.

실감경제,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윌리엄 헨리 베버리지 명언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의 행정관이자 경제학자. 실업문제를 깊이 연구해 직업소개소와 실업보험제도 창설에 큰 공을 세운 사회정책학자다. '국민적 최저권(National Minimum)' 개념을 정립해 여러 나라의 복지국가 건설에 큰 영향을 준 '베버리지 보고'를 정리해 발표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79~1963.

☆ 고사성어 / 견소왈명(見小曰明)

사소한 것을 보고도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 낼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일컫는 말이다.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 52장에 나온다. “작은 것을 보는 것을 ‘밝음’이라 하고, 부드러운 것을 지키는 것을 ‘강함’이라 한다[見小曰明 守柔曰強].” 주변의 미묘한 감제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세심하게 관찰하며, 다가올 일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자세를 뜻하는 말이다.

☆ 시사상식 / NG족

'No Graduation'의 줄임말. 졸업유예를 표현하는 정식 용어는 '캠퍼스 모라토리엄'.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도 자발적으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뜻한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심해짐에 따라 졸업 전 마지막 학기를 휴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선정한 우리말 순화어는 '늑장졸업족'이다.

☆ 신조어 / 주린이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 주식투자 기간이 짧은 투자자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 유머 / 손자의 꼬

할아버지와 손자가 걸을 때 손자의 담임 선생님이 나타났다. 할아버지가 “애, 어서 숨어라. 너 오늘 학교 뺑뺑이쳤대며!”라고 말하자, 손자가 “할아버지가 숨으셔야 해요”하고 소리쳤다. 할아버지가 “왜?”하며 반문하자 손자의 대답.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김우람 자본시장부/hura@

테슬라가 친환경 기업이라고?

지 소모량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아르헨티나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쓰고 있다는 추정까지 나온다.

가상자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쓰는 일명 '작업증명(PoW)'이라는 채굴 시스템은 해마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른 채굴자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단순 반복 계산하는 컴퓨터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전기를 생산하다 보면 다 쓰지 못하고 남는 전기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전력 시스템의 본질

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전기 생산에서 유틸리티는 일종의 비상 예비 전력이다. 평소 사용량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는 차원일 뿐, 마구 쓰라고 남겨 둔 게 아니다. 현재 사용하는 방식에서 전기 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극도로 초기 비트코인의 컨셉트를 유지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을 전기 소모가 덜한 쪽으로 바꾸겠다는 연구는 들어본 적이 없다.

테슬라가 단지 친환경 이미지로만 인기를 끄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하나의 이유는 사라졌다.

이슈&인물

文정부 부동산 정책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부동산 정책 저격수’다.

1999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하며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주택 공급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분양가를 못 올리게 하는 제도) 시행, 공직자 투기 근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격차를 줄이는 것) 등 굵직한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실련과 김 국장의 쓴소리는 정권 성향을 가리지 않는다. 그 지향은 단 하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김 국장과 만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고언(苦言)을 들어봤다.

용적을 완화, 누구한테 혜택 가겠나

김 국장을 만나기 이틀 전, 정부는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경기 광명·시흥지구를 지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3만 가구 규모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4 대책)’의 첫 작품이다. 김 국장에게 신규 택지 공급 실효성을 물었다.

김 국장은 “정부가 2025년까지 확보하겠다는 82만 가구는 지구 지정 기준이다”며 “실제적인 공급 효과는 없고 이전 대책과 뭐가 다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대책이 정말 필요한 공급이냐는 의문도 해소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말이 나온 김에 김 국장에게 2·4 대책에 관한 총평도 부탁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이 이번 83만 호 대책만 있는 게 아니라 전에 127만 호 공급 계획도 나왔고 주거복지로드맵 등도 계속 던졌는데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가장 큰 3기 신도시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와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공공자가주택 쪽으로 쓴소리 화살을 옮겼다. 공공자가주택은 개인에게 주택 소유권은 분양하되 주택을 처분할 때는 그 시세 차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이다. 변장형 국토교통부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주장하던 주택 유형이다. 정부는 2·4 대책에서도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재개발과 저층 주거지·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 개발로 공급되는 주택 중 20~3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정말 중요한 건 분양가 책정이고, 공공 보유주택을 몇 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게 없다”며 “들여다 보면 원가와 상관없는 분양가 책정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 주도 개발 유인책으로 제시한 용적률 완화에도 날을 세웠다. 김 국장은 “정부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늘어난 주택 수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용적률 상한이 아니라 현행 용적률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저층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한다면 그 개발이익을 주민들 몫이라고 할 수 있는냐는 게 김 국장 논지다.

MB 저렴주택 공급 오히려 평가할 만

김 국장은 “지금 집값 상승 원인은 공공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지난달 2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은 이전 정부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83만 가구’ 지구 지정 기준

여러 사회변화 측면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공급이나 의문도

분양가상한제 한다며 두 번 유에 ‘정부 속내는 집값 잡기 싫구나’ 이런 신호가 집값 상승 이어져

매입 임대·재임대·분양전환형 주거약자 주거안정 별 도움 안돼 공기업, 건설형 임대주택 늘려야

부족 때문이 아니다”며 집값을 폭등시킨 진범으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특혜, 규제 좌고우면을 지목했다. 그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겠다는 통계가 있는데 1주택자 자가 보유율은 늘어나지 않았다. 서울은 50%가 되지 않는다”며 “다주택자 편중 현상이 심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문재인 후보가 도시재생 뉴딜을 공약하면서 강북 아파트값이 올랐는데 임대사업자 활성화와 제도가 이를 더 부추겼다”며 “다주택자에게 말로는 ‘파시라’고 해놓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어마한 지원을 했다. 2017년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나온 후 2018년 집값이 엄청 뛰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2019년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놓고 유에 발언을 두 번 하니 시장에서 ‘정부 속내는 집값 잡기 싫구나’라는 신호로 보고 가격이 또 올랐다”며 “그 사이 또 공급 확대·개발 정책을 내놓으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는데 이전 정부보다 못하고 있다”는 김 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높이 평가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주택을 공급해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다. 그는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하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마곡·항동·세곡지구 등에 3.3㎡당 500만~900만 원짜리 저렴한 주택을 꾸준히 공급했다. 반값 토지임대주택(건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는 주택) 등으로 서민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꾸준히 분양시장에 나와야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김 국장 지론이다.

‘원배일리’ 상한제 땀 3000만원 가능

김 국장과 경실련이 그간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주장해 온 것도 이런 소신에서다. 경실련은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현재 공공 택지와 수도권 일부 민간 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에서 전면 실시하고, 분양가 상한선 책정 근거가 되는 분양 원가 책정도 투명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다만 일각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제함을 못 쓰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땅값을 평가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올리면서 아파트 건설 택지비가 올라가고 분양가 상한선도 높아진다는 논리다. 다음 달 분양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배일리’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3.3㎡당 5668만 원에 분양가가 산정됐다. 지금까지 공급된 아파트 중 가장 비싼 분양가다.

김 국장은 이 같은 비판을 “기계적 해석”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매년 법정 감정가를 공시가격으로 발표하는데도 서초구에서 별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에도 공시지가 대로 택지비를 적용했다면 원배일리로 3.3㎡당 3000만 원에 분양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LH·SH 수용권…저렴주택 공급 가능

김 국장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도 쓴소리를 냈다. 김 국장과 경실련은 인터뷰 전날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급된 임대주택 대부분이 매입 임대나 재임대, 분양 전환형 주택으로 주거 약자의 장기적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 국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공공택지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지금 해야 할 건 신도시 안에서 건설형 임대주택 단지를 짓는 본연의 역할”이라며 “비싼 민간주택을 구매, 재임대하는 건 효과도 적고 부패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경실련 정신이 실사구시(實事求是·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다. 그간 팩트(사실)를 제시하고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지금까지 왔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이끌어내고 고위 공직자 다주택 보유에 대한 엄격한 눈높이를 만들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사설

국민소득 2년 연속 감소, 더 커지는 소득양극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755달러(3747만3000원)로 잠정 집계됐다. 2019년 3만2115달러보다 1.1% 줄었고 2년 연속 뒷걸음질했다. 계속된 경기 부진과 코로나19의 충격,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소득 감소다.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1.0%였다.

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했다. GNI의 2년 연속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11.2%)과 2009년(-10.4%) 이후 처음이다. GDP 역성장도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래 22년 만이다.

1인당 GNI는 국민의 평균적 생활 수준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2017년 3만1734달러로 처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7번째 ‘30-50 클럽’(인구 5000만 명, GNI 3만 달러 이상) 국가에 들어갔다. 다음해인 2018년 3만3564달러로 5.8% 증가했으나 2019년 -4.3%, 2020년 -1.1%의 감소로 돌아섰다.

국민들의 살림형편이 나빠졌음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데 있다. 통계청의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4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5분위(상위 20%)는 1002만6000원으로 2.7% 증가했다. 정부가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푼 공적이전소득 효과를

빼고 근로소득만 따지면 1분위(59만6000원)와 2분위(188만2000원)가 각각 13.2%, 5.6%나 감소했고, 5분위(721만4000원)는 1.8% 늘었다.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탓이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4.72배로 전년(4.64배)보다 커졌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분배가 악화하고 소득상·하위의 빈부격차가 벌어졌다는 얘기다.

소득을 끌어올릴 경제성장력도 갈수록 쇠락하면서 나아질 전망도 어렵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계속 후퇴했다. GDP성장률이 2017년 3.2%에서 2018년 2.9%, 2019년 2.0%로 떨어졌다. 올해 3%대 성장이 점쳐지지만, 작년 마이너스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회복세로 보기 어렵다.

경제 혁신의 동력을 살려 성장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국민소득 증대와 빈부격차 완화를 기대할 수 없다. 다시 소득 2만 달러대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우려된다.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다. 기업투자를 복돋아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소득도 고루 늘어난다. 획기적 규제 혁파,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 선진화,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문제인 노동시장의 개혁이 다급한데 거꾸로만 가는 현실이다.

진료실 풍경

기다리던 전화가 왔다. “H아빠입니다. 많이 좋아져서 퇴원했어요. 병원에서 켈 순한 백혈병이라 골수이식까지는 필요 없고 항암치료만 해도 된답니다. 원장님 덕분에 일찍 발견해서 천만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좋아졌다고는 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고 숨이 차는 느낌도 들었다. H네는 온 가족이 우리 병원 단골이다. 25년이 넘었다. H가 결혼하여 아이까지 우리 병원엘 오니 3대가 다니는 셈이다. 4개월 전에 H아빠가 몸살 기운이 있다며 왔다. 목이 아프고 한기가 돌고 머리가 찌뿌듯 하단다. 진찰상 특별한 소견이 없어 몸살에 준해 약 처방을 했는데 약을 먹어도 좋아지는 걸 모르겠다며 몇 번을 다시 왔다. 링거 처치를 해도 마찬가지다. 한 달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 별 기대는 안 하고 검사나 한번 해보라며 한 건데, 백혈병이었다. H아빠는 “백혈병요? 그럴 리가요?” 했다. 바로 큰 병원으로 가라 해도 회사에 복귀해서 급한 일부터 마무리하겠단다. 그럴 정도는 아닐 거라는, 잘못된 검사라는 표정이었다.

유전 혹은 면역력 ①

나와 비슷한 나이의 환자가 오면 누가 더 젊어 보일까 비교하는 습관이 있다. 애매하다 싶으면 간호사들에게 물어봐 내가 더 젊어 보인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곤 했다. 근데 H아빠는 나보다 젊어 보이는 몇 안 되는 환자 중의 한 명이다. 고혈압 당뇨도 없고 체중도 적당하고 담배는 안 피우고 술도 잘 못 마신다. 어린 H와 동생을 데리고 진료를 받으러 다닐 때부터 웃기도 잘하고 다감해 참 성실한 아빠구나 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백혈병이라니?

헛헛한 미소를 지으며 믿지 않으려는 것도 이해는 됐다. H도 H동생도 H엄마도 진짜 백혈병이냐고, 요새 회사의 노조 일을 맡아서 골치가 좀 아픈 거 말고는 건강관리를 엄청 잘하는 아빠에게 왜 그런 병이 오냐며 이해가 안 된다고 따지듯 물었다. 그냥 운이 없어서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대답했는데, 대학병원에 가서도 똑같은 말을 들었다고 했다. 억지로라도 많이 먹고, 체력을 길러 병을 이겨내고 꼭 다시 만나자며 반가운 전화를 끝냈다.

유인철 안산유소아청소년과 원장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K텔레콤의 AI 서비스가 새로운 생활을 만듭니다

우리 가족을 알아보고 지켜주는 집과
당신의 목소리 하나로 시작되는 서비스

누군가에겐 자신을 먼저 챙겨주는 가족이자
누군가에겐 다정한 친구이고 말벗

내 취향을 기억하고 추천해 주는 플랫폼부터
필요로 하기 전에 알아서 돕는 기술까지

모든 순간 AI가 함께 하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모두의 생활을 위해
SK텔레콤은 당신 가까이에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